

GOVP1200613435

T0013630

농업 · 농촌 발전기본계획

2004. 5



농림부

목 차

제1편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농정 기본방향	3
I.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5
II.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15
제2편 농업·농촌 종합대책	21
I. 농업의 체질 강화	23
II.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63
III.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75
IV. 지역농업 발전계획	87
제3편 주요 품목별 대책	89
I. 쌀 대책	92
II. 원예 대책	96
III. 축산 대책	102
IV. 임업 대책	107
제4편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정비	111
제5편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농업·농촌 미래상	117
<별첨>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	126

추진경과

- 그간의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SOC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 지속
 -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 농업·농촌이 FTA, DDA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
- '01년이후 준비해 온 작업과 '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바탕으로 '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
 -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농업인의 날」)
 - * 「농정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와도 협의
-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 확정
 - 앞으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매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조정할 계획

여 백

제 1 편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농정 기본방향

I.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II.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 체계

여 백

I.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과제

1. UR이후 대책 평가

가. 추진성과와 한계

□ '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

○ 영세한 농업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

* 1ha미만 영세농가 비중('90) : 약 60%

* 국내외 가격차('89~'91) : 쌀 4배, 콩 5.1배, 쇠고기 4.6배, 사과 2.4배, 참깨 9.3배

○ 특히,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 ('91) : 경지정리율 39%, 배수개선 57천ha(24%), RPC 2개소, 도매시장 6개소

□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

○ 우선,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 시설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

○ '92~'02년 기간 중 82조원(지방비 10, 자부담 10 포함)을 투입자

* 중앙지원분 62조원의 주요 내역 : 생산기반정비 19.5조원(31%), 유통시설개선 4.7조원(8%), 농업기계화 3.6조원(6%), 영농규모화 3.5조원(5.6%), 축산구조개선 6.3조원(10%), 기술개발 2.1조원(3.4%) 등

□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인프라를 단기간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한·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

○ 빈번한 기상이변 등에도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

* ('92→'02) : 진흥지역내 경지정리율(목표대비 95%), 벼농사 기계화율(84%→99), 현대화 온실면적(45ha→8,983)

*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이 닦친 '99년에 10년만의 최대의 풍작, 전국적으로 최악의 풍수해를 겪은 '02년에도 쌀 생산이 평년작(3,422만석)

□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고급화 촉진

○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 확충

* ('91 → '02) : 미곡종합처리장 2 → 328개소, 도매시장 6 → 30개소

○ 농산물 등급화, 포장화 등 품질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품질인증 농산물은 '92년에 비해 61배 이상 증가(4천톤 → 246)

* 표준규격 출하율('91 : 10% → '02 : 50%)

□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

○ 규모화된 전업농이 빠르게 증가

- 3ha이상 재배농가 : ('91) 42천호 → ('02) 78

- 축산전업농 사육비중('95→'02) : 젓소 18% → 62, 돼지 37%→ 71, 양계 44%→ 65

○ 3ha이상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수준('02: 34백만원)의 소득실현

- 0.5ha미만 20,088천원/1.0~1.5ha 23,598/ 2~3ha 30,177/ 3~5ha 36,256/ 5ha이상 51,087

□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고, 복지 증진,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

○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지지정책을 주로 사용한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내의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문제 발생

* 호당 농가소득('95불변) : ('95) 21,803천원→('97) 21,910→('02) 21,853

○ 수익성,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의 부실초래

- '92년 이후 농가부채는 2.5배('92 : 5,683천원 → '03 : 19,898) 급증하여 농업인의 부채경감 요구가 지속

* 특히, 유리온실 등 시설투자가 많은 분야에서 부실이 주로 발생

○ 고령농 은퇴지원 미흡, 평균적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의 효과가 기대보다는 저조

○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해 농촌공동화 현상 심화

* 인구 3천명이하 面(전체 1,224개) : ('90) 152개 → ('00) 447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자생적인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

○ 그 결과 농업인의 과도한 정부 의존적 성향이 심화

나. 최근 농업구조의 변화 ('92 → '02)

농업인구 : 농가인구 비중이 13.1%에서 7.5%로 감소

- 농가인구는 '92 대비 41.5%(571만명 → 359) 감소
 - 농가인구 반감기간 : '70년 → '88년(18년 소요) → '02년(14년 소요)
- 농업 취업인구는 255만명에서 200만명으로 21.6% 감소

농업생산 : 실질 농업 GDP는 20조원 수준에서 정체

- GDP 중 농림업 비중 (6.7% → 3.7)은 매년 0.3%p 수준 감소
 - 농산물 생산액 비중 : 쌀(33% → 30), 축산물(23 → 28), 과일·채소(29 → 29)
- 중규모 농가의 비중은 줄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
 - 3ha이상 농가 : 52천호(3%) → 78(6) / 0.5ha미만 : 469천호(29%) → 433(34)

농가소득 : 농업소득 비중은 줄고 농외소득 비중은 증가 (5%p ↑)

- 소득비중 : 농업 51% → 46, 농외 30% → 33, 이전수입 19% → 21
 - * 농가소득(15백만원 → 25), 농업소득(7.4 → 11.3), 농외소득(4.4 → 8.1), 이전수입(27 → 5.1)
- 최근에 도·농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
 - 농가/도시 : ('90) 97.4% → ('95) 95.1 → ('00) 80.6 → ('02) 73.0
 - * 1인당 소득 : ('90) 97.7% → ('95) 102.4 → ('00) 90.8 → ('02) 82.4

농가부채 : IMF 등의 영향으로 농가부채가 지속 증가

- 호당 평균 부채는 2.5배 증가하였으나, 농가자산은 2.0배 수준 증가
 - * 호당 부채 : 5,683천원 → 19,898, 자산 : 29,366천원 → 87,336
 - 농가의 단기상환 능력 지표인 유통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약간 감소 (56.7% → 53.6)
- 젊은 농가·대규모농가·시설농가 위주로 부채부담이 과중
 - ('02) 30~39세 농가부채 : 4,737천원, 3.0~5.0ha 농가 부채 : 4,161

소비·유통 : 식생활의 서구화 등 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화

- 1인당 쌀 소비량은 줄고 있는 반면, 축산물 소비량은 증가세
 - 쌀(112.9kg→87.0), 육류(23.9kg→33.5), 우유(44kg→64), 과일(52kg→59)
- 농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 비중 확대('97→'01)
 - 공동출하 35% → 60, 직거래 5.0% → 29.8

농산물교역 : 농산물의 수출·입 규모는 2배 수준으로 증가

- 수출 : 800백만불→1,474 / 수입 : 4,767백만불→7,644
- 식량자급도(70.3% → 58.3) 및 곡물자급도(43.1% → 30.4) 저하
 - * 품목별('02) : 쌀 107%, 보리 60.4, 밀 0.2, 콩 7.3, 쇠고기 36.6, 돼지고기 91.2

2.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대외적 측면

- DDA 협상 진행, FTA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
 - DDA협상, 2004년 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UR때 보다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 불가피
 - 세계 각국이 양국간·지역간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 DDA협상에 따라 관세율과 국내 보조는 상당 부분 축소 예상
 - 쌀 수매 등을 통한 보조가능액(AMS)이 '04년 대비 60% 수준 까지도 감축될 가능성(하빈슨 의장 초안의 경우)

대내적 측면

-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증대
 -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호당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
 - 농가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
 -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 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증가
 - * 구제역('00, '02), 돼지콜레라('02), 태풍 루사('02), 태풍 매미, 조류독감('03) 등 빈발
 - 농가의 차입자본비중이 높아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 환경이 급변
 -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
 - 고투입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영농으로의 전환 요구

- IT·BT 등 지식·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
 -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 모든 분야에 IT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산업구조가 변화
 -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

-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국내관광수요는 계속 증가
 - * 국민 국내관광객 : ('02) 연인원 4억명 → ('05) 5 → ('11) 6
 - 국민연금시대 도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잘 활용하고, 농촌 다움을 지켜나간다면 쾌적한 거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 과제

가. 향후 농정과제 도출 (SWOT 분석)

* SWOT :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등 4가지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영기법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도매시장·RPC 등 농업 SOC 시설은 상당 수준 정비 · 선진경영체와 영세농·고령농 세분화 ·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 ·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자체 성장동력 미흡 · 농가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식품산업 간의 연계 미약 · 농업인·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불신 상존
기 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친환경농산물, 의식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관광 등 여가수요 증가 ·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일본·중국 등 수출기회 증대 	<S-O전략>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대책 필요 ·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 농가소득의 제고 및 소득 안전망 마련 필요 · 농촌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의 증진 필요 · 농업인·농민단체를 농정에 적극 참여시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동력으로 유도
위 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DDA 협상, FTA 확산 등 수입개방 가속화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 시장 잠식 등 악영향 · 비관세장벽에 따른 무역분쟁 · 정보화·지식기반 경제화 진행으로 산업기반의 혁명적 변화 · 도시민이 가지는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경제의 걸림돌) 	<S-T전략>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규범에 따른 시장 지향적 산업정책 필요 ·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구조 조정 촉진 필요 · 농업과 IT산업의 접목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무역쟁점에 대한 대응 필요 (GMO, 원산지, 지리적 표시 등) · 농업·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필요

나. 향후 해결과제

-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
 - DDA 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 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
 - 환경보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도록 친환경 농업,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과감히 추진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특화 발전노력을 지원
-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하락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 확충
 -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가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원 창출
-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 실현
 - 연금, 건강보험, 상해공제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
 - 교육 환경, 의료 시설 등 기초 복지 인프라 개선
 - 생활환경, 관광편의시설 등 정주·휴식공간으로서 농촌개발 촉진

4. 농업 · 농촌의 역할

◇ 농업 · 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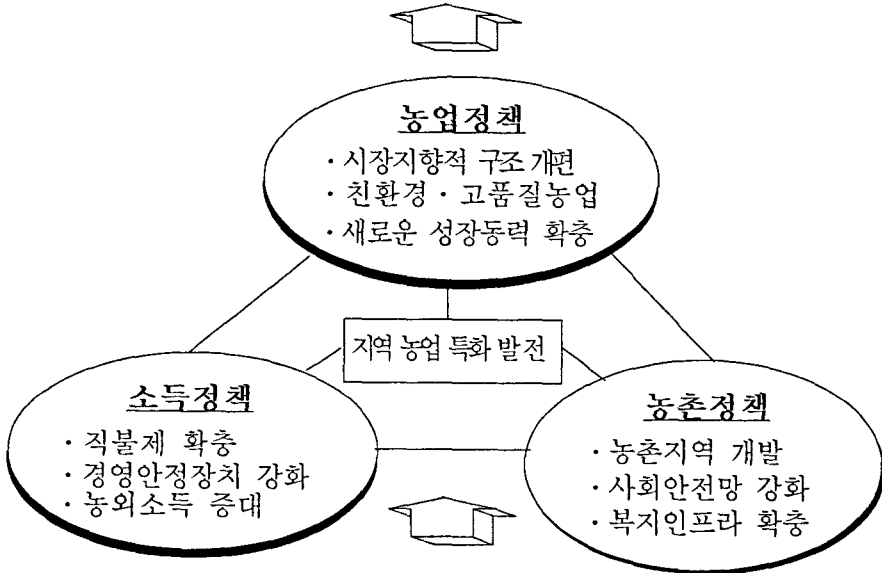
- 농업은 총 취업자의 10%를 맡고 있는 고용산업이며,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
 - 국가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02)이나, 투입재 · 농산물유통 · 가공 · 외식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비중은 14%
 - 농가인구(360만명) 7.5%, 농가구(128만가구) 비중 8.5%('02년)
- 농업 · 농촌은 국토 · 환경 보전, 자연경관 형성 및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역할도 수행
 - 홍수예방, 지하수 보충, 토양유실방지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보전 기능
 - 도시과밀화 방지, 일자리 창출, 농촌다움을 토대로 정주공간 유지, 여가공간 제공 등 사회적 역할
 - 선진국도 직접지불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업 보호
 - *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01) : 미국 36%, 일본 13, EU 70, 한국 7('02)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 · 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 · 농촌의 유지 · 발전을 위한 노력이 긴요
 - 통일이후에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고히 지켜주는 농업, 국민의 휴양공간 · 정주공간이자 생산공간인 농촌으로 자리매김

Ⅱ.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1. 농정비전과 기본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업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정책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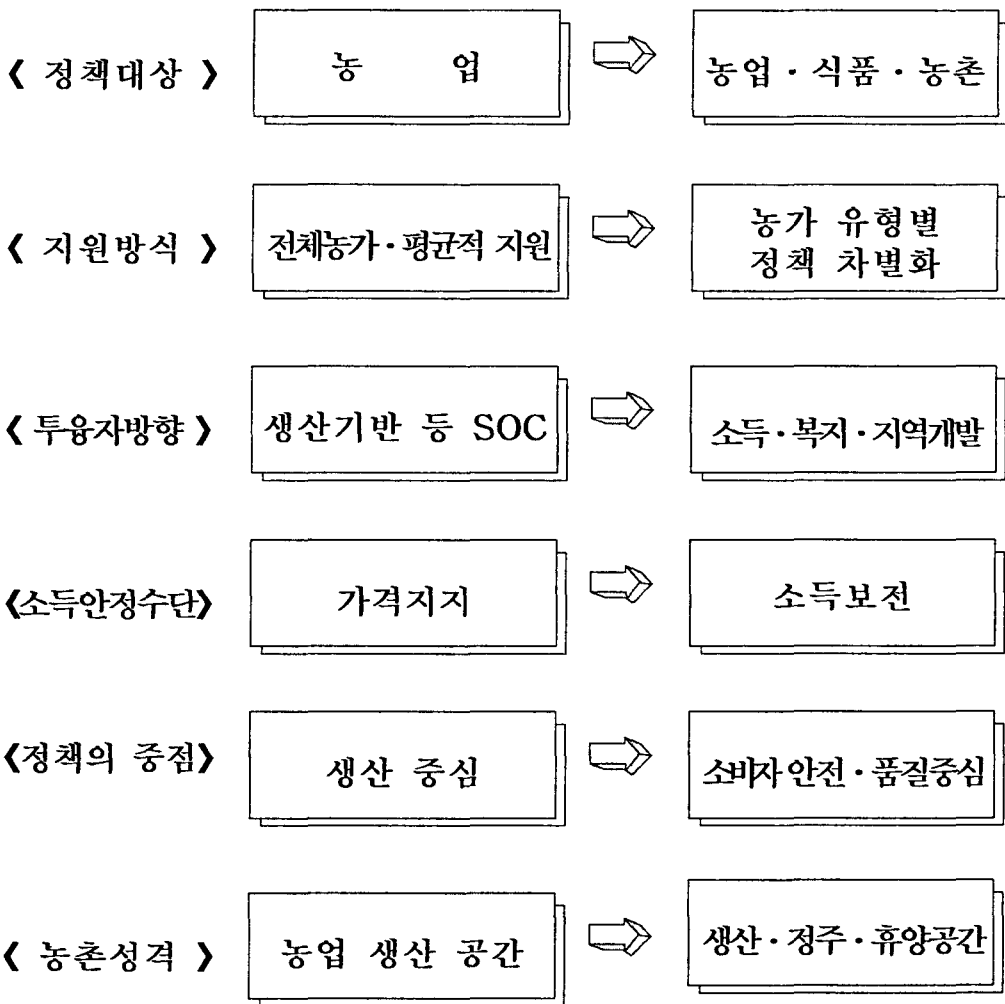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혼재 → 엄격히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시장원리, 농업인과 농촌: 소득·복지 정책으로 대응 ◇ 제정의 산업간·부문간 이익 조정자 역할 강화 ◇ 농업인·지자체·정부 등 농정주체간 역할 분담

2. 패러다임의 전환

- ◇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2단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 ◇ 소비자의 식탁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는 고품질 농업 육성
- ◇ 농업인 소득안정과 복지확충 및 농촌지역개발에 중점



1 : 농업 중심 → 농업·식품·농촌

-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
-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2 : 전체 농가 평균적 지원 → 농가 유형별 정책 차별화

-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경쟁력 제고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경쟁이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원이 집중되도록 제도개편
-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보완대책도 중점 추진
 - 은퇴 이후에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농업인 복지·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재촌탈농 여건 조성

3 : SOC 중심 투융자 → 소득, 복지, 지역개발 중심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불제 등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
- 생산기반정비는 축소하되, 노후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4 : 정부 주도, 가격지지→ 시장지향,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의사 결정 지원
-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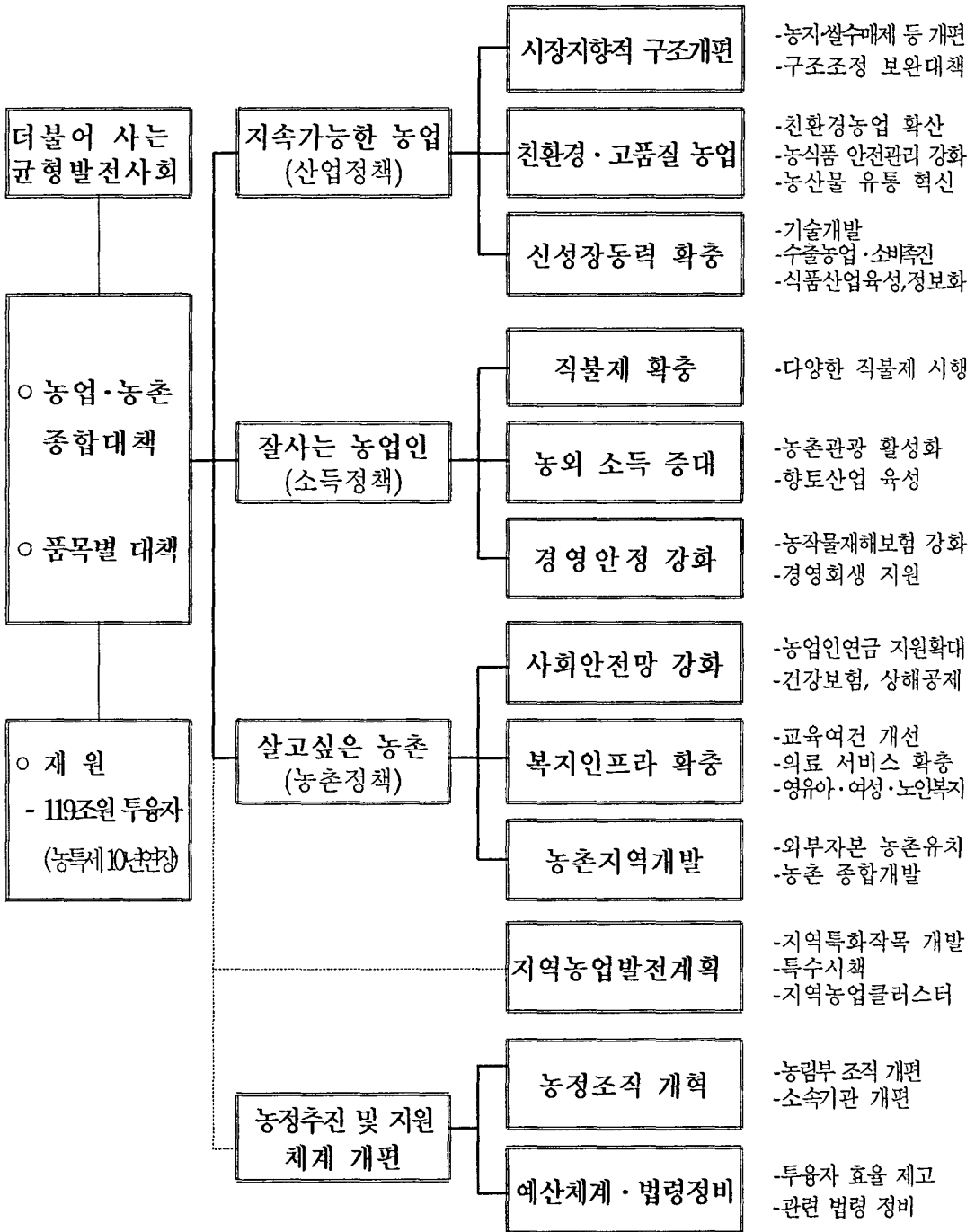
5 : 생산 중심 → 소비자 안전·품질 중심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역점
-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 개별 농가 규모화의 한계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로 보완

6 : 농업생산 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범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로 전환

3. 향후 농정 추진체계



농가 유형별 대응전략

- 차별화된 정책수단 적용으로 구조조정을 촉진 -

< 전업농 > : 규모화 촉진,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컨설팅

- 젊고 유능한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 촉진
 - 규모화 자금 지원 확대·농지유동화 촉진 등
-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프로그램 적용 등
- 소득 안정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경영 컨설팅 등에 중점

< 중소농 > : 고부가가치 농업, 경영 다각화, 농외소득

- 틈새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유기농업 등 고품질 농업으로 전환
 - 친환경직불제 강화,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받는 시스템 구축 등
-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충으로 소득 안정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등
- 농촌관광, 식품유통가공 참여 확대 등으로 농외소득 증대

< 영세·고령농 > : 재촌탈농 유도, 전직 교육, 사회안전망 강화

- 경영이양 직불제 등 영세·고령농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전직 교육, 노인복지 강화 등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확대

제 2 편

농업 · 농촌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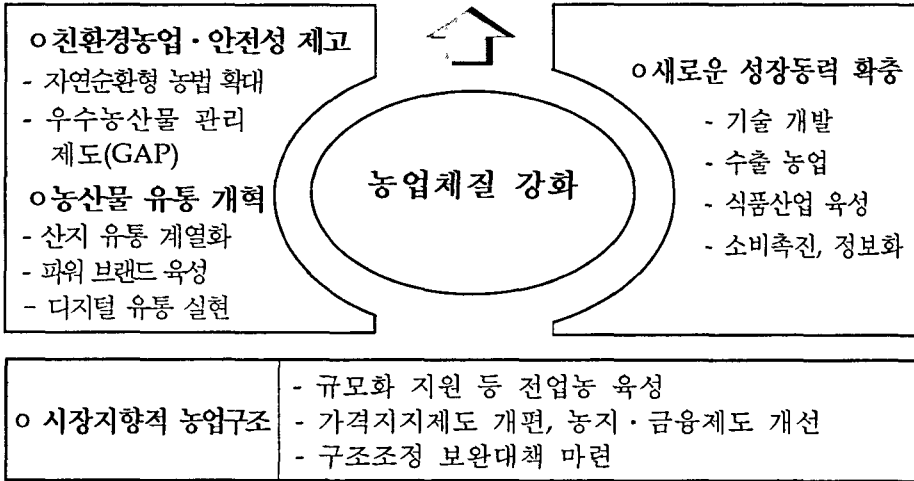
- I. 농업의 체질 강화
- II.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III.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IV. 지역농업 발전계획

여 백

I. 농업의 체질 강화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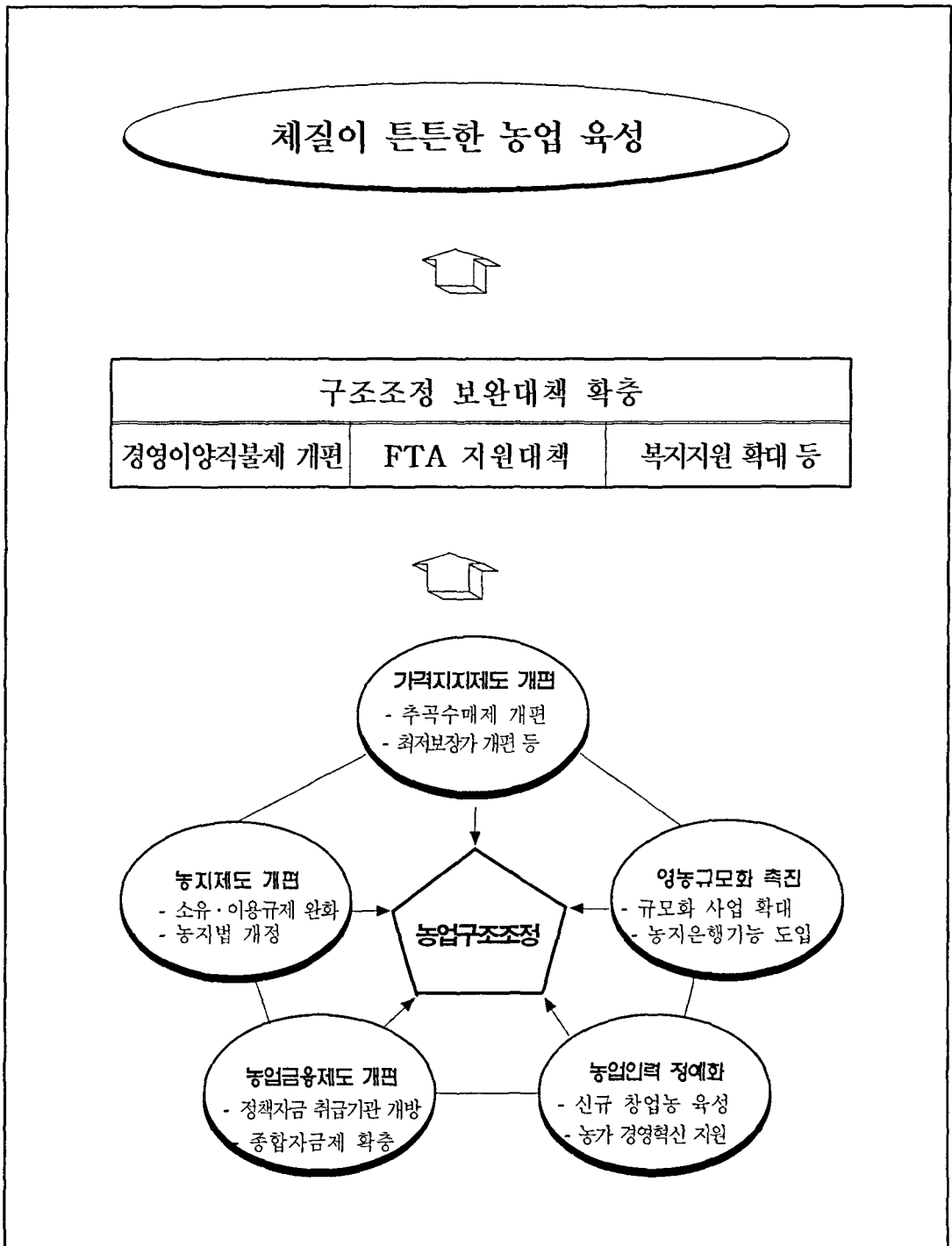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



《 로드 맵 》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시장지향적 농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제도 개편 ○ 경영이양 직불제: 연금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05) ○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 ○ 농지은행제도 도입('05) ○ 진흥지역 밖 우량논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05) 	
친환경농업 안전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비료 공급: 60만톤 ○ GAP 도입근거 마련 ○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 ○ 산지공동매칭조직: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5%('05) ○ 70만톤('05)으로 확대 ○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 ○ 96개 품목 실시('06) ○ 100개소('08)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로 확대('10) ○ 150만톤으로 확대('13) ○ 200개소('13)로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 ○ 농산물영양성표제 도입('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 50억불('13)

1.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곡수매제, 최저보장가격제, 원유가 결정시스템 개편

(1) 추곡 수매제 개편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소(연간 750억원)로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
 - 쌀 보조가능액(AMS)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경우 수매제도 유지가 사실상 곤란
 - 생산량 중 수매량 비중이 급격히 하락 : ('94) 1,050만석, 30% → ('03) 521, 17
-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
 -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방출
 - 공공비축 물량,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검토
 - * '04년말까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 근거 마련
-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소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장치도 대폭 보장
 - RPC의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을 생산량의 40% 수준(1,100만석)까지 확대('03:21%)하고, 부실 RPC 통합 등 경영개선 추진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보완하고,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

(2)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

- 주요 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현행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가 수매방식에서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예시 : 평년가격의 80%)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지원
 - '04~'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6년부터 제도 전환
- 계약재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개선
 -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03 : 11→'13 : 20%)하고, 계약재배 사업 주체도 산지농협 중심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다양화

(3) 원유수급 및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토록 유도
 -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
 - 낙농진흥회는 낙농정보 수집·제공, 우유소비홍보 등의 기능으로 개편하거나 해산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 현재는 생산자와 유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일반 유업체는 이를 준용

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

-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
 -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매년 4,500여명의 우수 신규인력 유입 필요
-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 신규 창업농을 집중 육성

-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매년 1천명 수준)
 -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35세 미만의 유능한 인력의 창업을 지원
 - 대학생(3~4학년)을 대상으로 창업 연수과정 설치·운영
 - 2년간 방학기간을 이용, 현장실습 위주교육 및 국내·외 선진농업연수 실시
 - 우수농가에서 1~2년간 농업에 종사한 경우(농업 인턴십) 창업 지원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현실화(현행 1억원 → 최고 2억원)
 -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정착을 밀착 지도
 - 여타의 신규 농업인은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종합자금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 (매년 3,500여명 수준)
-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05)
 - 전문대학과정 위주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화
 - 창업단계의 위험관리 교육 등 기술·경영·마케팅 위주로 개편

- 현행 3년제 학과 과정 외에 전문 직업훈련과정 신설
 - 교육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1년·2년 등으로 품목별 훈련과정 신설
 - 농과계 졸업생은 전공심화과정·창업설계지도, 비농과계 졸업생은 품목생산·경영에 필요한 실습 등 전공기술 중점 교육

1단계(2004)	2단계(2005)	3단계(2006~)
○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 방안 연구용역	○ 학교 발전방안 확정 ○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 등 마련	○ 직업훈련과정 실시 ○ 대학생창업과정 실시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협, 유통공사, 대학 등에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유통이론, 현장실습,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포함하되, 현장 애로 해결능력 배양에 중점
 - 교육이수자를 고용한 유통조직, 컨설팅 사업자 등을 우대 지원

(2) 농업인의 경영혁신 유도

-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
 - 농업인, 법인 경영체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단위의 공동 컨설팅 제도 도입('05)
 - 농업인 교육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
 - 농업인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운동 참여단체의 교육·홍보비 등 지원방안 강구
 - * 예 : 성공사례 발표회, 품질·안전성 제고운동, 공동계산·공동출하 운동 등

다.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촉진

◇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영위험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 '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0천호를 집중 육성

- 연차별 규모화 지원 면적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총 120천ha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
 - 전체 규모화 필요면적(164천ha)중 44천ha는 농가 자력으로 규모화하되, 정부지원 면적은 경영이양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
- 경영 규모, 부채, 농기계 보유 현황, 영농의욕 등에 대한 정밀한 경영진단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
- 쌀 전업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확보를 위하여 매매 사업보다는 임대차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영농규모화 사업중 임대차 사업으로 79천ha(66%) 지원
 - 매매·임대차 사업 비율은 지역여건 및 개별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규모화 지원외에 기술 및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우수 전업농의 벤치마킹 모델 제공 등 품질·경영교육 강화 및 경영 컨설팅 우선 실시
 - 전업농, 지자체, 지역대학, 연구기관, RPC(APC) 등과 정보네트 워크 구축

□ 자연재해·가격불안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지원 강화

- 쌀전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도작에 대한 재해보험의 조기 도입 방안을 강구
- 경영희생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회생을 적극 지원

□ 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지원을 과수선도농까지 확대

- 과수는 FTA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선도농가가 규모 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된 과수원을 매입한 경우 규모화 자금을 지원
- 과수 규모화는 6대 과종(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위주로 추진

□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지구입자금의 금리인하와 원리금 상환방식을 개선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영농규모화 사업에 매매정보 수집·제공, 알선 및 신탁 업무 등 농지은행기능을 추가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

* 단기 급격한 농지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매입기능 도입 검토

라.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

◇ 식량안보·통일대비 등을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이용·소유규제는 완화

- 적정농지면적 확보와 계획적·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정책적인 지원 강화
 - 적정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 진흥지역 해제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편입·관리
 -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을 차등화 하는 등 우대 지원 방안 강구
- 쌀산업의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를 혁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 주말·체험영농(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 확대
 - 허가제 형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신고제 형태로 전환
 - 지역발전특구 등 특정지역내에는 농지 소유·전용규제 폐지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위탁영농 허용**
 - 생산조정제 실시에 맞춰 신고휴경제도 도입
- 농지이용처분제도를 휴경보상제 및 소유규제완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완화
- **농지전용제도를 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
-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외에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허용행위 확대**
-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의료·교육·복지시설 등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 **면적제한을 철폐**하고, 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를 확대 (현재:10ha미만)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도 인하 추진
 - 농촌지역 투자 및 특정지구내 공공개발 등에 대한 감면폭 대폭 확대
-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04년 중 농지법 개정 추진**

마.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로 개편

- ◇ 정책자금은 대출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일원화
- ◇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단계적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07년까지 운영자금 성격의 50%를 종합자금으로 전환('13년까지 완료)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구매선도금·배합사료원료 구입 등 회전자금
 - 회계교육, 장부기록 등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 대출심사시 경영장부제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
- 농특회계 융자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농특회계 관리기관을 독립·운영하고, 정책자금 취급에 경쟁체제를 도입
 - (가칭)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농특회계 융자금에 대한 검사·감독체계를 강화
 - * 설립위원회 및 설립사무국을 구성, 실무작업 완료 후 별도법인 출범('04)
 - 점포수 및 점포분포도, 유사상품 취급경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중은행에 취급권한 부여
 - 운영자금 등 단순히 금융기관을 경유해 지원되는 자금부터 개방
 - * '05년 : RPC 운영자금, 가축계열화 사업, '06년이후 : 농기계 구입자금 등
 - 농신보 보증제도를 개편, 시중은행에도 보증 허용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워크아웃시스템 구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 회생이 어려운 농가는 파산신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이 되도록 「**농가파산제**」 도입을 검토

- 농업수익성·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
 -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중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의 일정 수준 이하로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 ('05)
 - 조기상환자에 대한 금리할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상환 유도
 - 거치 및 상환기간도 자본회임기간, 내구연수 등을 반영하여 **장기화**(예 : 현행 10년 수준에서 20년 이상)

-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신용보증여력 확충
 - 금융기관 출연을 인상, 여유자금 운용 다양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부분보증제 책임제**를 확대하여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부분 보증율 : (현재) 10% → (개선) 30%

바.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

(1)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

◇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단가를 대폭 확대하여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급방식도 일시급에서 분할 지급방식으로 개편

□ 고령농이 농지 이양 후 영농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

○ 10년이상 쌀 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가의 진흥지역 내 논(2ha이내)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지급

○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

- 지급단가 : (현행) 289만원/ha, 1회 → (개선) 월 241천원/ha, 최장 8년

* 장기 임대시에는 2,977천원/ha를 일시불로 지급

- 농지 매매대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하되, 일시불 지급비율도 다양화(50%, 70%)하여 농가선택권 보장

* 0.5ha미만 농가와 금융기관 담보 및 부채 농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불 지급 추진

□ '05년 이후에는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진흥지역 밖의 우량논과 진흥지역 내 밭으로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진흥지역 밖, 한계농지 등을 소유한 농가가 재촌탈농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2) FTA 지원 대책 추진

◇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7년간 1.2조원 규모의 특별기금 설치

○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안정을 중점 지원

□ 한-칠레 FTA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고품질 생산시설(예 : 포도 비가림, 키위 네트, 복숭아 관수시설 등)을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농가에 집중 지원

○ 전국 단위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유통을 계열화하고, 광역 산지유통센터(APC) 등 유통시설을 중점 지원

○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과원매매·임대차를 지원

□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관세철폐품목(예 :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등) 재배 농가가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강화

○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

○ 경쟁력이 낮아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년간 순수입액 범위 내에서 폐업보상금을 지급

-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결정

(3)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
-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
- 현재 22%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공제 지원수준을 강화
-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대

□ 자녀 교육, 건강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료 복지인프라 확대

- 농촌 고교생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을 단계적 확대
-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 여성농업인과 농촌 노인의 복지지원을 강화

□ 농촌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업무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 농특세를 10년간 연장(20조원)하여 농업인 복지증진 등에 집중 투자

사. 농업인의 정의 조정 및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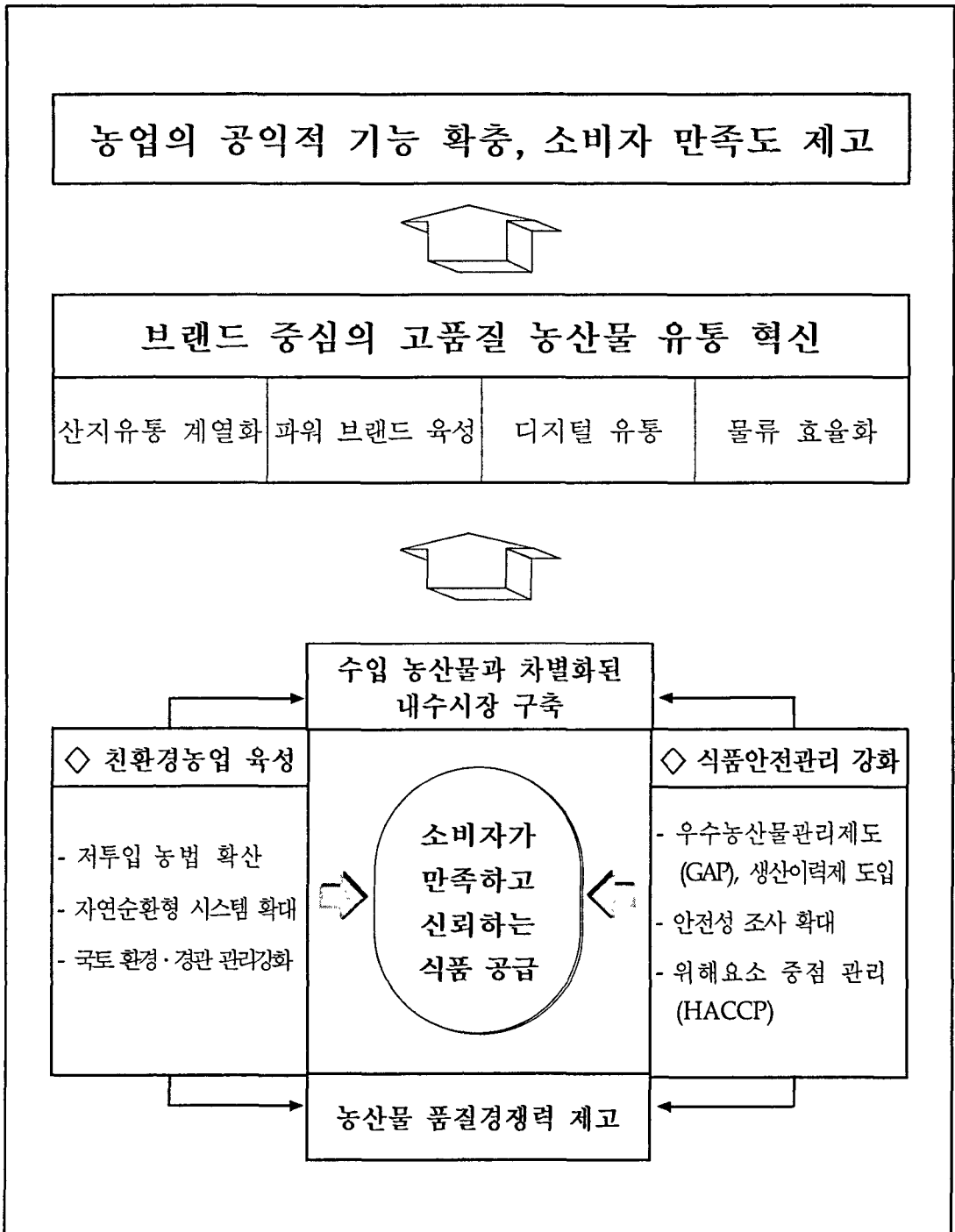
농업인의 정의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여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등 정책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경작면적, 판매액, 노동일수를 기준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대표적으로 규정
 -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소득·복지정책의 대상, 농협조합원 자격 등과도 밀접히 관련
- 앞으로 농업인의 정의를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관계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04)를 거쳐 농업·농촌기본법에 반영('05)

식량자급률 지표

- DDA이후에도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과 그에 따른 품목별 정책수단을 강구
 -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식품소비 구조의 다양화 등을 감안할 때 칼로리 기준 자급률 설정이 필요
 - 전체 공급 칼로리 기준,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필요 칼로리 기준 검토
 - * 일본이 유일하게 식량자급률 목표('10년 45%) 설정
- 쌀 협상 결과 등에 따른 국내 식량자급 전망 검토 후 농민단체,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04)하여 '05년까지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

2.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 비료·농약 과다 사용,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과감하게 전환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편**

- 저농약 인증농산물은 명칭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05)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물류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여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현행 3%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 지원도 내실화

○ 생산비 절감 기술, 다양한 친환경 농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촉진

- 농업기술센터별로 전담자 지정, 친환경 농업 시범포 설치 등으로 현장에 밀착된 기술개발 체제 구축

○ 단지화된 작목반,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초생띠 조성 등 실천 유도

○ 인증 농가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제 지급대상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일반 농가로 확대

- 농가여건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메뉴형으로 전환

□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고, 지역별 농업환경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환경·경관 관리를 강화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04)

* (소) 초지·조사료 자원 확보 및 분뇨 환원, (돼지·닭)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 환원, (공통) 분뇨처리 경로 확인,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교육 이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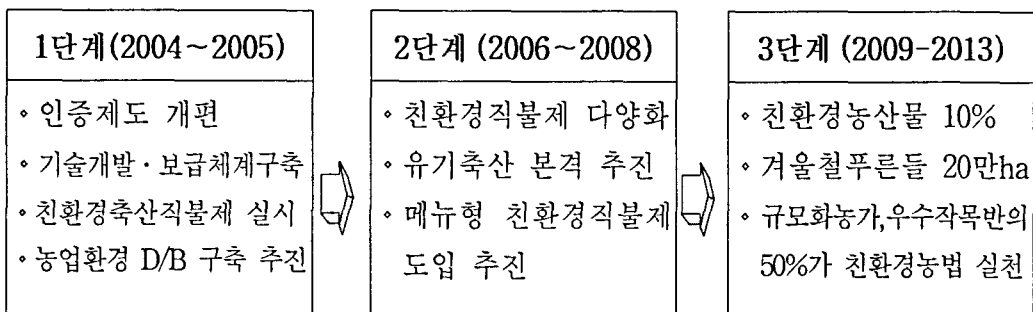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액비저장조 : ('03) 680기 → ('04~'08) 8,800, 축분비료유통센터 : ('04~'08) 20개소

○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분뇨 배출과다 시·군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추진

○ 지역별 농약, 화학비료, 분뇨 등의 환경 위해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D/B화

< 추진 일정 >



나.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농산물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본격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
 - ‘04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GAP도입 근거 마련
 - 참여농가가 GA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운영
 -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제로 정착

		‘03하반기	‘04	‘05	‘06 이후
○ 사업 대상		채소·과일류, 특용작물, 수출농산물 등 중심으로 시범사업			품목 확대
○ 제도 정비	- 근거법		근거법마련	하위법령 제정	
	- 재배지침	66품목	15품목	15품목	보완·확대
○ 교육			교육체계구축	교육 실시	교육 의무화

-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 방지
 - 산지 거점 시·군에 정밀분석실을 확충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
 - * 정밀분석실 : (‘03) 9개→(‘09) 47, 안전성조사 : (‘03) 58천건→(‘13) 90

-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이외에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 등으로 확대('07)
- 안전성 기준 위반자는 D/B화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법적 제재 뿐 아니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 GAP농산물, 수출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 실시('04)하고, '06년부터 96개 품목으로 확대
 -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농산물에 대한 기초정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13개의 각종 표시제, 인증제의 통폐합 추진
 -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농식품안전포털사이트』 구축('05)
-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유해물질 절감기술 등 관련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
 - '13년까지 미생물 농약 33종을 추가 개발하고,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미생물관리 및 검정기술 개발·보급
 - 생산 단계에서 지켜야 할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1,000개 수준으로 확대('09)

축산물

□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사육단계 :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
 - 동물사료 내 농약, 항생제 등 동물약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휴약기간 준수 등 농가교육을 확대
 - 사료공장에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 적용으로 안전관리 강화('06)
 -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도축·가공단계 : 도축검사 강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 도축장 검사인력 확충,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결과 공표
 -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지도 강화, 실명출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5)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07)하고, 시설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축산물 가공장에 HACCP 적용 확대
 - 유통·판매단계 : HACCP 도입, 식육처리기능사·위생감시원제 도입
 - 축산물 판매장에도 HACCP를 신규 적용하고, 보관·운반·판매장에 대해 위생관리기준(SSOP) 의무화 추진('05)
 -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 보유 의무화 검토
 - 위생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을 위생감시원으로 활용, 식육점 등 영업장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생산·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이력(출하자, 도축일, 사양관리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04부터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다.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1) 거점 시설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계열화

◇ APC, RPC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산지 공동마케팅조직을 차세대 산지유통주체로 육성

- 생산-유통의 계열화 중심체로서 산지유통조직의 발전 내실화
 - 경영혁신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인센티브 자금, 시설 등 집중 지원
 - 계약재배 및 품질기준 단일화, 공동선별·파렛트 출하, 판로개척 등 평가
 -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

- 우수 산지유통조직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 하도록 하여 차세대 기업형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제도화
 - 비용·수익이 분명한 독립채산·책임경영제·공동계산 정착으로 경영구조 선진화
 - 규모화된 거점 산지조직형, 사업연합형, 유통기업 공동출자법인형 등으로 다양화
 - 지역·품목단위 조합간 공동출자·판매사업 방식 제도화
 - 농협법에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공동출자기업 설립기회를 촉진
 - 각종 정책자금(고품질 생산, 계약재배, 시설자금 등)을 유통종합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무이자 계약재배자금을 마케팅 역량있는 우수조직 중심으로 지원

-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세척, 선별, 가공, 전처리시설 등 고부가 가치 상품화가 가능한 **산지유통센터(APC)** 설치를 지원
 - **대규모 APC**는 지자체 참여 방식으로 군 단위 이상 광역기반 조직, 독립적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APC를 중심으로 소규모 저장·선별시설 계열화 촉진
 - **활용도가 낮은 APC** 등 유통시설을 임차 또는 M&A하는 유통조직에 운영비 및 시설보완 우선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시·군 단위 2개 이상 설치지역(49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영부실 RPC는 통합,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사내분사제** 도입을 유도
 - 정부지원 RPC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 RPC에 집중 지원
 -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내실화
 - 계약재배 내용에 품종·농약사용·시비관리·수확시기 등을 포함
 -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조기 확충
 - '10년까지 수확기에 1,100만석 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02 : 555만석)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우수 도축장 중심으로 **도축·가공 일관처리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
 - LPC 등이 브랜드 경영체 및 대형 판매점과 연계한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경영자금 중점 지원**
 - 도축장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하고 도축장 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 시설자금** 우선 지원

(2) 시장 영향력을 갖는 파워 브랜드 육성

◇ 농축산물 유통의 전략적 축으로서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13년까지 전체 브랜드 농산물의 50%를 공동 브랜드화

□ 주요 품목별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전국 대표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자조직,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촉진

-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 등 초기개발비용 지원(개소당 5천만원, 농안기금 50%)

- 자조금사업과 연계,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대표 브랜드(예 : 과수 공동브랜드 "Sunplus")로 발전 유도

- 전국대표브랜드 가입농가, 회원 APC·LPC등을 중심으로 전국대표조직을 통해 품질·안전관리, 마케팅, 수출, 수급조절 기능까지 담당

- 지리적 표시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평가 및 홍보 강화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브랜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05)

- 홍보도 수급상황에 따른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

-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축산물 브랜드전, 브랜드 경진대회 등을 활성화

(3)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off-line 유통기반
바탕 위에 전자상거래 등 on-line 유통을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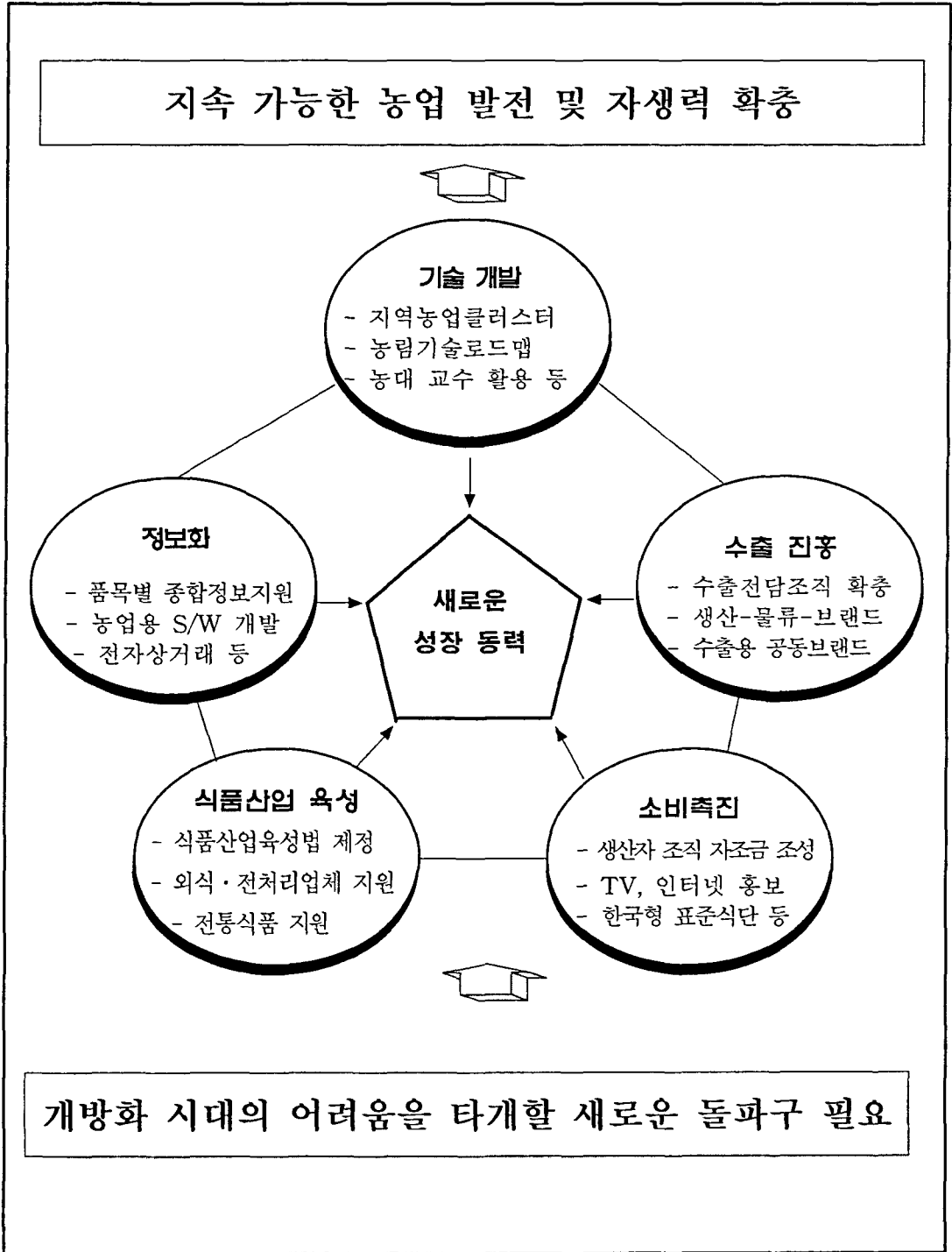
- 소비자와 산지간 디지털 유통정보·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촉진
 - 종합유통센터간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하처와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구축
 - 도매시장과 APC, RPC를 연결하는 전자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
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품질 위주의 농산물 규격을 정착시키고 도매시장의 품질관리, 시설보완 및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 보호협약 개발
- 파렛트 출하, 표준하역비 적용 확대 등으로 물류 선진화에 역점
 - 포장재지원 중심의 물류표준화 사업을 공동선별, 파렛타이징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
 - '08년 이후는 파렛타이징 중심의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통합
 -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 하역비 차등화·경매우선 등 우대
 -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무·배추의 물류표준화 방안을 강구
하고, 하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하역비 제도를 내실화

라. 가축질병 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 해소

◇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발생시 **초동방역**을 강화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및 출입국자 집중 관리 등 **국경검역활동 강화**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
 -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처분, 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 강화
-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체제** 구축
 - 방역교육 실시, 예방주사 등 방역비용 농가 분담, 농장소독·거래기록 등 위반농가 처벌강화 등으로 농가 방역의식 강화
 -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제 도입('05년 농장단위), 수입위험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 요구에 사전 대응
 -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
 - 혈청검사·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질병별 SOP 구축 및 발생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역활동 전개
 - 질병 발생농가에 과태료·보상금차등·사육제한 등 처벌 강화
- 지자체·민간의 방역인력 확충으로 **방역주체간 역할 분담**
 - 수의보조인력제 도입 등 방역본부 인력 및 예산 확충
 - 방역소홀 지자체에 축산사업비 차등지원 등 제재 강화

3.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가.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 혁신체계 마련
- ◇ 농림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R&D투자방향과 실행전략 수립
-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기능을 대폭 확충

- 지자체 및 지방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
 - 지역특화작목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 지원, 지역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R&D 예산 등 재정적 지원 확대
- 현재 기술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농림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핵심 기술분야를 중점 선정
 - 농림기술로드맵을 기초로 기술개발 실행전략을 수립, 농림 기술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04)
 - 생명공학, 수출지원, 농가소득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R&D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 제고 분야는 대폭 축소

□ 수확후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에 중점

○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후(post-harvest)관리기술 품질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

- 미생물 농약 및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 축분자원화 기술 등

○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개발**에도 역점

- 가축질병예방 백신개발, 형질전환 동식물개발, GMO작물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등

○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 전통 식품의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추진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 기능을 대폭 확충**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애로기술 조사(연1회 이상)를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일선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보급

○ 농가에 대한 **특화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 → 도기술원 → 시군센터 → 농업인』 체제에 전문가인 **농과대학교수의 참여를 활성화**

○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거래 촉진

나.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 농업과 식품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산업으로 발전
- * 현재는 안전 규제 중심으로 체계적인 육성정책은 부족한 실정

□ (가칭)「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04)

- 식품 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포괄

< 주요 내용(안) >

-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지원방안, 인증제 등 제도 도입, 통계조사, 식생활 가이드 라인 등

□ 원료조달-식품생산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산업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식품관련업체(식품제조, 외식, 식자재업체)에 대해 우수 농산물 사용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 원료조달비 등을 지원

- 중소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화,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에 적합한 원료 농산물 발굴과 기능성 검증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

- 식품 분야별 생산 규모, 원료 수급, 소비계층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 친환경 인증 등 우수 농산물 사용, 원산지 표시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우수식품업체 인증제도」를 도입(민·관합동) 검토
- 전통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지원
 - 농산물 가공공장(‘03:623개소)·특산단지(681)는 신규 지원보다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TV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
 - 한식·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업체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
 - ‘04년 : 우리식문화 해외홍보전 정례화, ‘05년 : 해외 한식업체 현황조사, ‘06년이후 한식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 전통식품 名人제도는 주류 중심에서 장류, 한과류 등으로 다양화 하고,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민속주·농민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가칭) 「전국 전통주 품평 및 시식회」 개최,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민속주와 특산물을 Package로 홍보
 - 전통주·민속주 등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 예시 : 민속주 통신판매를 농협 등으로 확대 등
-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및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판매·수출 등 지원근거 마련

다.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시장별, 품목별로 과거와 차별화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중점 추진

□ 농식품 수출 배가를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 수립·추진

- 바이어 중심의 수출 방식에서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 신규 수출 수요를 적극 창출('04)
 - 해외농업무역관을 중심으로 외국 소비자 대상의 판매촉진기능 활성화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선정부터 생산·수확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 추진('04)
- 외국 대형유통업체 등이 전문생산단지 등과 장기 계약을 통해 한국산 농산물 해외 공급기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 추진
- 해외 판촉 활동도 박람회 참가, 판촉전,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방식으로 방향 전환

□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 체계를 강화

-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기존 전문생산단지('03:108개)를 우수단지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 추진

- 수출물류비는 대형 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최소 지원기준 ('03 : 수출실적 10만불이상)도 단계적으로 상향
 - 수출농산물의 商·物流의 거점인 수출물류센터(광양, 마산)는 초기에는 수출업체·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생산자단체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검토
 -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는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 전략품목을('04 : 3품목 → '08 : 11) 대상으로 추진
 - 생산이력제 도입,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품위관리·규격화
- 한·일 FTA에 대비한 「대일본 농산물 공급전략」 마련
- 「한·일 FTA 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
 - 농림식품수출입조합, 식품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운영·의견수렴
-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여 수출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
- 유통공사 내에 해외마케팅, 수출 농산물 품질·안전성 확보, 수출 컨설팅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
 - 해외농업무역관을 확충하고, 현지시장개척기능을 중점 수행
 - 농업인이 겪는 수출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공사가 농산물 수출보험을 대행 관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 초기에는 수출서류작성 대행, 수출품 가격 산정 등을 수행하되, 향후에는 보험인수·보험액산정·손실지원 등도 대행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의 생산·유통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

라. 농식품 소비촉진으로 확고한 내수기반 구축

◇ 정부-지자체-생산자가 연계하여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

□ 농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홍보 대상별로 특징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

- 청소년층 : 캐릭터, 게임 등 선호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 주부층 : 다양한 요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년층 : 우리 식품의 기능성·영양성 등 건강 효과를 강조

○ 본격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시스템 구축

- 농림부에 전담조직 설치('03), 유통공사에 홍보전담기구 설치 추진('04)

□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

- 정 부 : 종합적인 홍보전략수립·조정, 지원 제도 및 자금 운영
- 지자체 : 향토축제, 농촌관광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 생산자단체 : 자조금 조성을 통해 자율적인 판촉 활동 강화 등

□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조례제정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우선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지원 실시
 - '05년에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확대 추진
- 농산물 영양성(또는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식생활 지침, 표준식단 개발·보급 등 국민 식생활 개선

마. 농업경영·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

- ◇ IT를 활용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
- ◇ 농업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영 효율화 도모

- 품종, 재배 기술,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종합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품목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술, 수급 동향, 소비자 기호, 수출입 정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
 - 인터넷, PDA, 휴대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
 - 농업정보119대학 및 정보화선도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화 교육 확대

- 농업용 S/W를 적극 개발·보급하여 경영효율 제고
 - 온도·습도, 햇빛, 양액 등 정밀 자동제어 기술을 중점 지원
 - 시설채소, 화훼, 버섯 등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
 - 품목별 경영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
 - 경영분석 및 평가, 생산이력 관리, 비료·농약 등의 최적 사용 유도

- 농식품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종합정보서비스
 -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위생)·유통·소비와 국경검역이 연계된 농축식품 안전(Traceability) 정보체계 구현
 - 농식품안전 DB, 농축산물식별코드(RFID) 국가표준, 가축방역GIS정보, 국경검역정보 등의 정보표준화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물류 정보화를 적극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지원 강화
 - 홈페이지 제작 및 수정, 운영기법, 대금 결제 및 배송정보 제공 등
- 위치추적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를 적극 추진
 - 물류정보망, 산지와 소비지간 자동 주문 및 배송시스템 구축 등

□ 연구기관, 농업계학교, 농가,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운영

- 온라인을 통해 영농, 행정, e-Learning 학습체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혁신 지원
- 지역별로 정보화선도자를 발굴하여 정보화 확산 핵심세력으로 육성

□ 정책지원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

- 농업정책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결정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활용
- 농가이력 DB 구축으로 중복지원 방지 및 대상농가의 체계적 관리
 - 우선적으로 직접지불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농지, 농업용수,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추진 강화

- 농지관리 및 토양분석에서 농작물 작황·생태환경·토양오염·용수관리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

4.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 확충

가. 경제림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이용

- ◇ 경제림을 집중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
- ◇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 산지 자원화를 위해 경제림을 집중 육성

- 인공 조림지 180만ha를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
-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 및 육림 방법을 차별화
 - 펄프, 보드류 등 소경제 생산목적의 산림은 단벌기(短伐期) 경영 유도
 - 건축, 가구 등 대경제는 벌기령을 상향조정하여 장벌기 경영을 유도

□ 숲가꾸기 5개년 계획('04~'08)을 수립하여 우선 시급한 100만ha (연간 20만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 실시

- 산림의 자원가치와 생태 환경적 편익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추진
-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 조직 등 지원체계 보강
 - 산림자원관리법(가칭) 제정 및 산주 부담금 감면 등 추진
 -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산림사업 이력 전산화 추진

□ 전국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체계를 구축

- 기능에 따른 차별화된 산림관리로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
 - 6대 기능 : 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산림휴양, 생태보전, 목재생산
- 임도를 지속 확충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06년까지 완료

나. 산림경영 개선

- ◇ 국산재 이용 촉진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 ◇ 산림경영과 산지소유를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차별화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영세성·저수익성의 사유림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경영의욕이 있는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산림조합은 산주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기능위주로 개편
- 국산재 수집·이용을 촉진하고 폐목재 활용('02년 32%)을 촉진
 - 국산재 수요에 대비하여 주요 수종의 이용·가공기술 개발
 -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을 위해 폐목재 및 간벌재 수집비 지원
 - 목재수요 촉진과 목재문화 진흥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 목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목재 방음벽·담장 등 국산재 신수요 창출
- 재해예방과 위험분산을 위한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방댐 등 산림 수해방지시설을 확충('12년까지 4,000개)
 -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관리체계 확립
- 민간부문의 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
 - 산림경영기간 종합토지세 및 경영산림의 상속세 면제 추진 검토
 - 산림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단순 소유자는 지원 배제
 - 용자는 경영체별 종합지원, 조림·육림 등 공익성 사업은 무이자 지원

다.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

- ◇ 산림의 생태적·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강화
- ◇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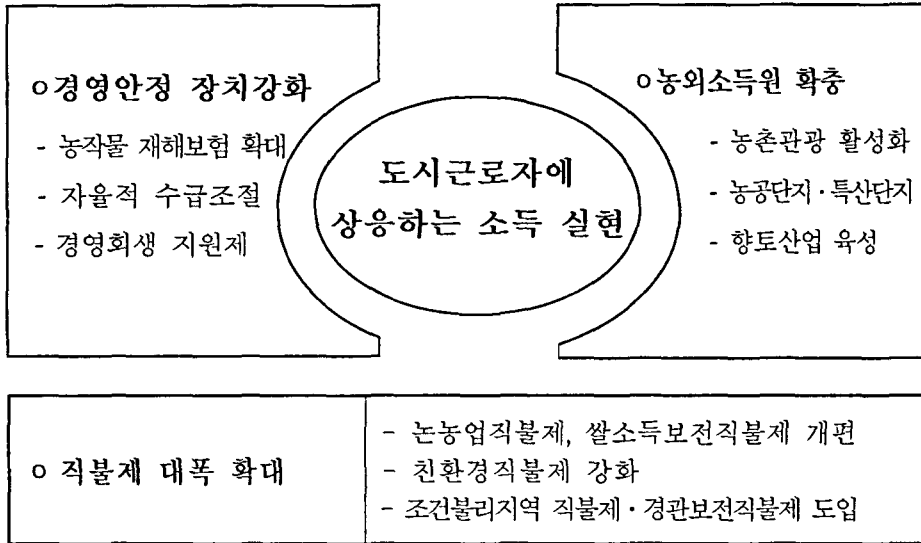
-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산림의 녹색댐·탄소저장기능 제고
 -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산림생태계의 축으로 보전·관리
 -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조사확대 및 정보관리 강화
 - 5대강 유역 수자원 함양림 101만ha를 생태적으로 중점관리

- 국·공유림에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국민의 숲』을 조성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형 “도시산림공원” 조성
 - 단체의 숲, 자원봉사의 숲, 사회환원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 도시 녹지를 1인당 6㎡에서 9㎡(FAO권고)으로 확충

-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촌진흥
 - 산림 휴양공간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07년까지 자연휴양림을 92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
 -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비하여 산악레포츠 등 전문 휴양림 도입
 - '07년까지 도시근교에 산림공원 30개소, 종합산림휴양단지 9개소 조성
 - 전통·녹색자원을 보유한 산촌을 거주공간 및 녹색관광 거점화
 - 백두대간 등 주요 등산로보전·관리 강화(국가탐방로 지정 등)

II.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비전과 전략》



〈 로드 맵 〉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직불제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투여자 비중: 10.8% ○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실시(31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로 확대('08) ○ 경관보전직불제('05) ○ 생산중립직불제('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로 확대('13)
경영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전국 실시 ○ 국가재보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 소득안정계정 도입('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
농외소득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관광마을 : 32개 ○ 농공단지 : 30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개소('05) ○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 314개소로 확대('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개소로 확대('13) ○ 394개소로 확대('13)

1.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

◇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

- 직불금을 '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수준으로 확대

농가소득안정 유형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
 -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직불제로 개편하여 개방 확대에 의한 소득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전업농가의 소득안정장치로 내실화
 - '04년도에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연속 가입한 농가에 대해 납부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
 - **보전수준과 농업인의 납부금은 농가경영여건에 따라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쌀소득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쌀전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규모에 따라 보전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DDA 협상 및 쌀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 가격, 생산량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변동에 품목단위 직불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07)
-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와 정부가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가계정에 공동 적립하고,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인출

공익적 기능 제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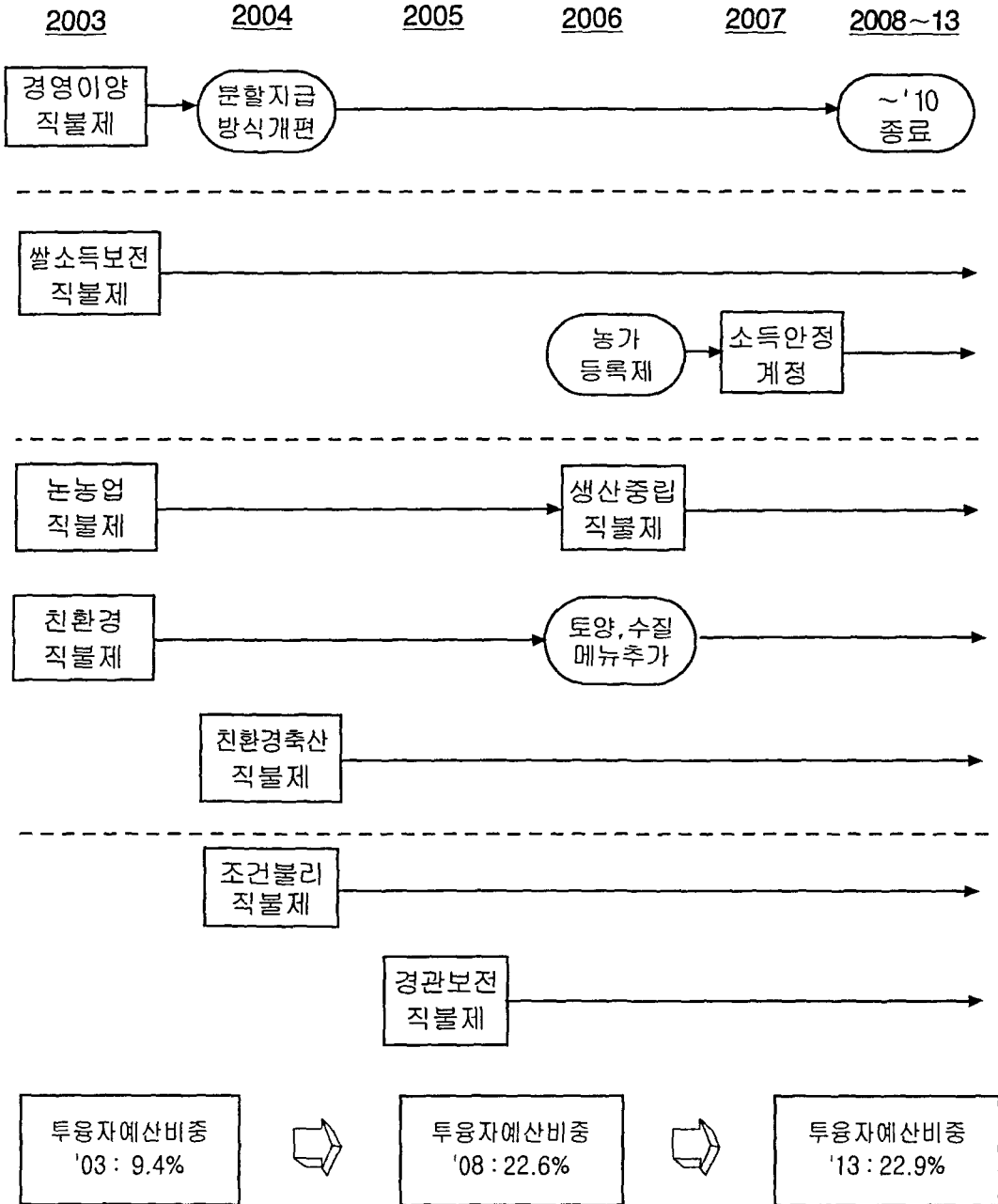
- 친환경직불제는 토양, 수질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
- 논·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
 - 지급요건은 ①재배과정에서 비료·농약의 사용절감 ②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③지력증진 의무 등 검토
 - 지급단가는 일반농법과의 소득차이,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축산분뇨 자원화, 조사료포 확보, 사육밀도 완화 등을 조건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04)
- 향후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행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부여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직불제 지원대상 정책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농촌지역 활성화 유형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계,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마을기금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상향식 발전 유도
 - 경사도, 경지율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 '04년부터 시범사업(31천ha)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
 -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관을 발굴하고 마을·지역단위와의 경관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05)
 -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농경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구단위(최소 5ha 이상)로 선정
 - 계단식 논밭, 가축을 이용한 경작·자연형 농수로 등이 남아있는 농경지, 지역 고유의 향토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등
 - 중앙정부는 대표적 경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시·군은 기준에 적합한 경관을 발굴하여 신청

직불제 연차별 확충 계획



2.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대상 재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축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재해유형을 대폭 확대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위험 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 '04년부터 포도·단감·복숭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 '13년까지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개 이상으로 확대
- **병충해 등을 제외한 모든 재해로 보험대상 재해 확대**
 - '08년까지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
 - 농가별 평균 생산량 산정방법을 강구한 후 All-Risk방식 도입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부담 완화**

□ 이상기후 등 거대 재해에 대비, 국가재보험제 도입('04)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을 일원화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08)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을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마련
- 품목별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보험기반 구축 및 농업재해복구 지원과의 연계강화

나. 사전적 재해 예방 및 사후적 희생 지원 강화

- ◇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복구 지원 수준을 현실화
- ◇ 일시적 경영위기의 극복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상설화

□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시설 확충

-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이상홍수시 인적·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11년까지 조기완료
 - 배수개선 목표를 지표배수개선으로 축소조정(235천ha → 188)

□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충하고, 농가의 조기 회생을 중점 지원

-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비는 표준규격시설 및 실제 복구단가로 현실화
-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용자금리 인하 추진
 - 농경지복구 및 농림시설복구시 보조율을 100%, 50%로 각각 상향조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희생지원제」 상설화('04)
 -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처 7년

다.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 계약재배·출하사업을 내실화하고, '13년까지 34개 주요 품목의 생산자조직중심으로 자조금 단체 결성을 추진

□ 계약재배·출하사업은 참여주체 다양화, 계약방식 개선 등 내실화

- 사업주체는 공동마케팅조직, 가공식품업체 등으로 다양화
- 0.3ha이상 농가, 생산량의 50%이상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소규모 농가(0.3ha 미만)는 작목반 단위로 참여 허용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계약재배자금 우선 지원
 - 계약 재배자금 지원품목제한도 폐지

□ 품목대표 조직의 자조금 단체화를 촉진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

- 사업실적, 조직화 연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100%에서 200%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
 - 자조금 조성은 연간 출하액의 1% 범위내에서 3%까지 확대 추진
- 품목대표조직의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초기) 교육·홍보·판촉, (발전) 브랜드 상품화·품질관리, (정착) 자율수급안정
- 재배지역이 전국에 산재된 품목은 시·도단위 자조금 단체를 인정하여 전국단위 조직체로 발전 유도
 - 자조금에 국비 및 지방비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지방비 20, 국비 30, 자부담 50)

3.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

◇ 2·3차 산업유치로 '13년까지 농외소득 비중을 67%까지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확충 등 적극 추진

* 2013년까지 연간 150백만명의 도시민을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으로 유치

(1) 농촌 어메니티 증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시·군당 5~7개 마을을 거점마을로 육성하고, 거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13년까지 총 1,000개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되, 지자체의 관광마을기반조성 노력을 대상 마을 선정시 중점 고려

○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농촌관광 붐 조성 및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

□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Amenity)를 증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

○ 독특한 지형과 전통적 특성 등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직불제 도입 추진

○ 향토문화자산을 농촌 관광에 접목시키고,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사업에 적극 활용

- 마을꽃길 조성, 담장 조성, 마을숲 조성, 마을안내판 설치 등

□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지도자, 마을 주민, 담당 공무원 등 대상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육내용 및 기관을 차별화
 - '08년까지 농촌관광마을을 선도할 마을지도자(3천명) 집중 육성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과정을 개설하는 등 농과계 대학에 교과과정 또는 학과 설치를 유도
- 농촌관광마을 지도자를 보좌할 「마을 사무장」 제도 도입
 - 정부가 선발·교육하고, 활동비는 지자체 및 파견마을에서 부담

□ 농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확충하여 인터넷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TV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실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학습 장려
 - 교과과정에 농촌체험학습을 포함시키고, 시범학교 지정·운영
- 「1社1村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도·농 자매결연 촉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농촌관광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 농촌관광마을 조성 및 인력육성, 숙박시설 관련규정 등 체계적으로 정비
- 농업기반공사내 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전환하여 농촌관광 컨설팅, 교육, 홍보업무 등을 전담
- 전국 또는 지역단위에서 농촌관광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 등급제, 브랜드 통합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

(2)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지역의 특유한 전통고유기술, 토산품, 관광문화상품 등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여 부가가치 창출

○ 지자체 중심으로 학계, 산업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향토지적 재산을 조사·발굴

※ 향토지적재산 : 각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 환경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식품, 주류, 염료, 도자기, 설화, 인물 등을 포괄

○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여 향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농촌진흥청, 농관원 등을 통한 연구 및 품질의 차별성 입증

※ 상품화 사례 : 황토제품, 숯, 머드팩, 야생화 향수, 김치스파게티 등

□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관리 강화

○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고유브랜드 개발

※ 사례 : 함평군 나비브랜드 '나르다', 충남 농산물 '으뜸Q' 등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조례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강화

- 브랜드 사용승인 및 수수료 등 징수로 지자체 수입 확보

□ 지역 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를 발굴 지원

○ 관광상품성이 큰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03년 30개 향토축제에 총 1.6천만명이 방문(경제효과 6천억원 수준)

○ 방문객 만족도, 외국인 수용태세,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3)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농공단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단지로 발전

○ 농촌주민의 취업기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확충 계획 : ('03) 296개소 → ('13) 394

○ 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적극 유치

-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완화(지역특화업체가 단지면적의 75%이상 → 50%)하여 농·축산물 전문단지 조성 확대

- 일반단지도 입주업체 선정시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

○ '94년부터 적용되어 온 입주업체 지원자금 수준을 대폭 현실화

* (현행) 10억원(시설비7, 운영비3) → (개선) 25억원(시설비15, 운영비10)

□ 특산단지는 지자체 주도하에 목공예·죽제품·모시 등 지역 이미지가 강한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활성화

○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

□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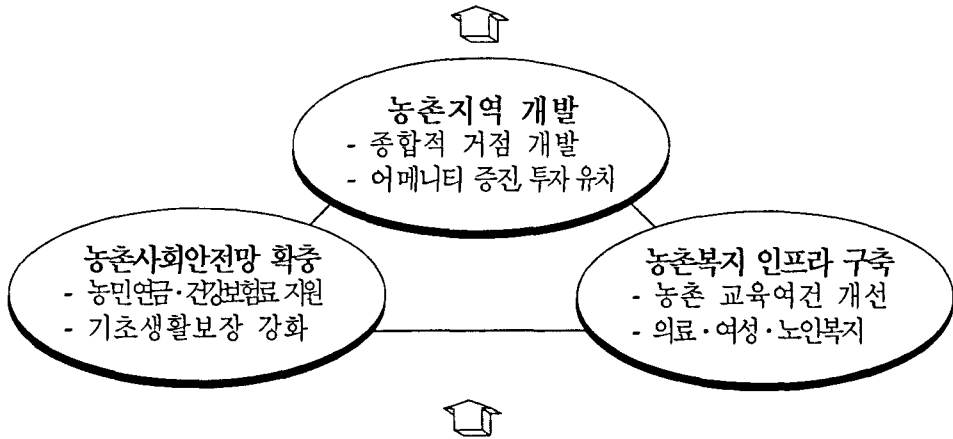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제품 판매 촉진

Ⅲ.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비전과 전략 >

도·농균형발전으로 살기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구현

* 2013년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위원회 : 범정부적 지원 시스템
- 농어촌특별세 : 복지 및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

< 로드맵 >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경감율: 30% ○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로 확대('05) ○ 중위수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로 확대
교육·의료·복지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03 : 1ha)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 ○ 여성농업인센터 : 2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농가로 확대('05) ○ 2ha미만 농가로 확대('05) ○ 34개소('05), 163개소('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농가로 확대('10)
농촌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육성 : 매년 20개소 ○ 농촌마을종합개발 : 16개 권역 ○ 주택음지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개('05) ○ 경관협약 시행('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개소로 확대('13) ○ 1,000개권역으로 확대('13)

1. 범정부적 농촌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으로 농촌복지·교육·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 농촌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이내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실무위원회」 설치(위원장 : 농림부장관)
 - 농촌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
 - 농어촌의 시각에서 문제인식, 조정·자원배분, 피드백하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

- '04년 중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5년부터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실태, 농촌교육여건, 교통·통신·환경, 기초생활여건 등 농촌지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04)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04)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은 매 5년 단위로 자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추진
 -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종료된 때에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평가

2.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개선, 농업구조조정 연착륙을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 도모

○ '04년부터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인상 : ('03) 22만원 → ('04.7) 37 → ('05 이후) 57

- 1인당 년 지원액 : ('03) 85,800원 → ('04.7) 최고 135,500 → ('05) 최고 256,500

□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을 22%외에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특별 지원

○ 경감 비율 : ('03) 22% → ('04) 30 → ('05) 40 → ('06) 50

○ 월 경감보험료 : 8,550원 → 12,750원 → 18,760원 → 26,850원

□ 농작업 상해공제보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사망·1급 장해 9,000)하고, 상해 공제료 지원 수준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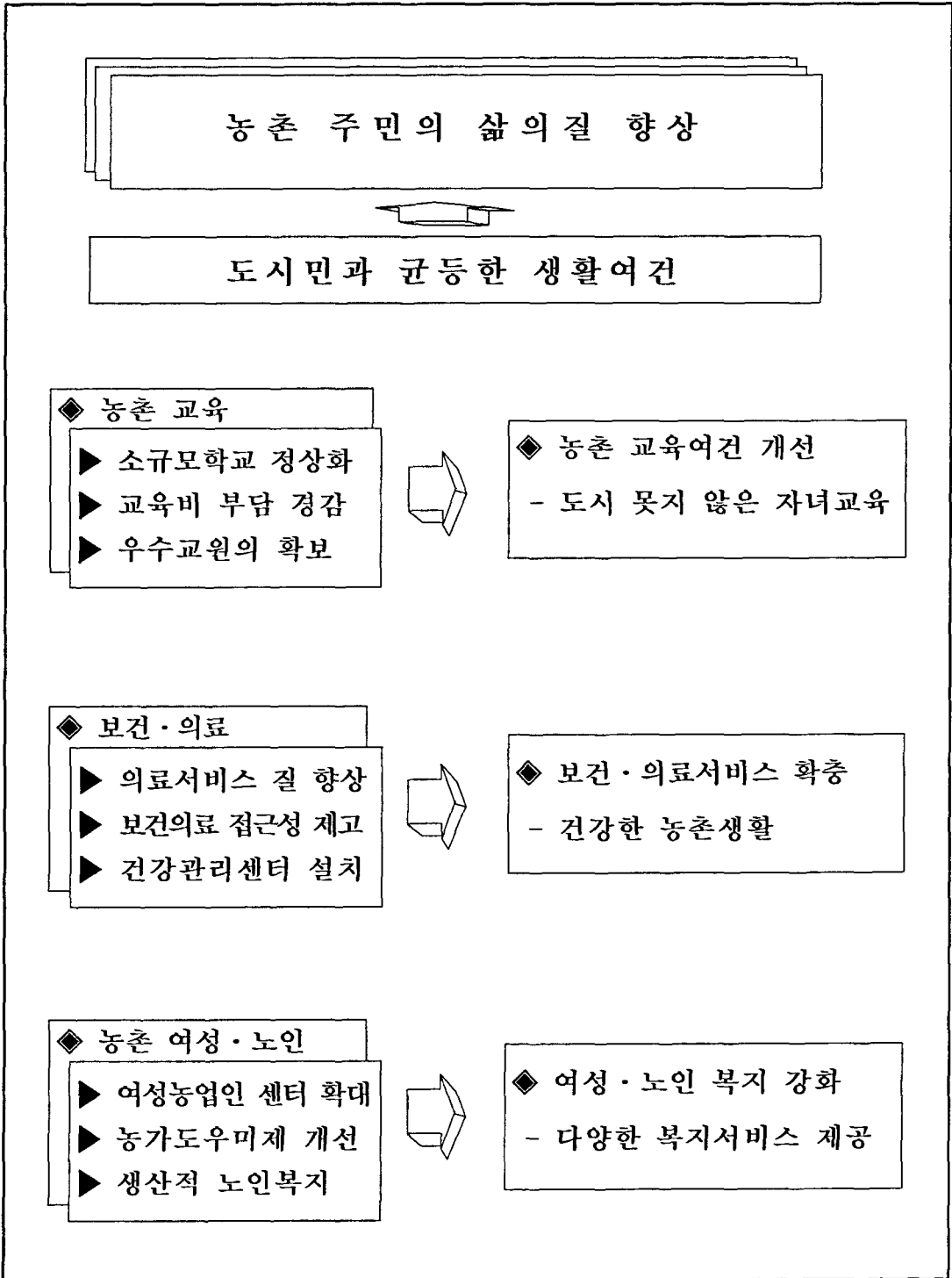
* 공제료 지원수준 : ('03) 평균 공제료(22천원)의 50% → ('13) 평균 공제료(125천원)의 50%

○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업인 재해보험제도 도입 검토

□ 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 기준을 농어민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농업인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 강구

3.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확충



가.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교육비 부담 등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농가의 대다수가 이농·탈농 희망

□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농촌 교육의 질 향상

- 통학거리 내에 있는 2~3개 작은학교를 하나의 학교群(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시설 현대화 및 통학버스 운영 지원
- 초·중·고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통합학교 확대
-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과 학력향상 「방학캠프」 운영
 - 특기·적성교육 및 원격교육 활성화
-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 ('03) 57관 → ('13까지) 117

□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우수고교 육성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인원 확대
 - ('03) 200만원, 15천명/학기당→('04) 학비전액, 15천명→('05) 학비전액, 20천명
- 농촌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 ('03) 1ha미만 농가 자녀 → ('04) 1.5ha미만농가 자녀 → ('05) 전 농가자녀

○ 농촌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시설 현대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에 자율권 부여

□ 농촌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확충 및 양육비 지원

○ 농촌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

○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평균 102천원/월)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단계적 확대

- 대상 : ('04) 1.5ha미만(49천명) → ('05~'09) 2 (57) → ('10) 전농가 (70)

□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제 확대

- 교대 정원의 일정비율을 교육감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 2~4년 장학금 지급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 의무 부여

○ 농촌 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 사택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쾌적한 주거편의 제공
- 순회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 농촌 학교 근무수당 신설 등 농촌 근무 인센티브 부여

- 복식학급 담당교사 및 순회교사 수당 신설, 도서·벽지수당 현실화

나.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시설·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수 : 시지역 95.6개소, 군지역 32.9개소

□ 보건소 중심의 농촌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지속 보강

○ 군 보건소에 장비·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농부중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

- 읍·면에 건강기구 등을 구비한 건강관리센터('03 : 744개소 → '07 : 1,425) 설치 및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확대('03 : 697명 → '04 : 1,000)

○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장비·인력 보강

- 물리치료실, 치과용 장비보급 및 한의사 및 치과의사 단계적 배치

○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

□ 응급의료기관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확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설치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전담의사 인건비 보조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화 추진

-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다. 여성농업인 · 노인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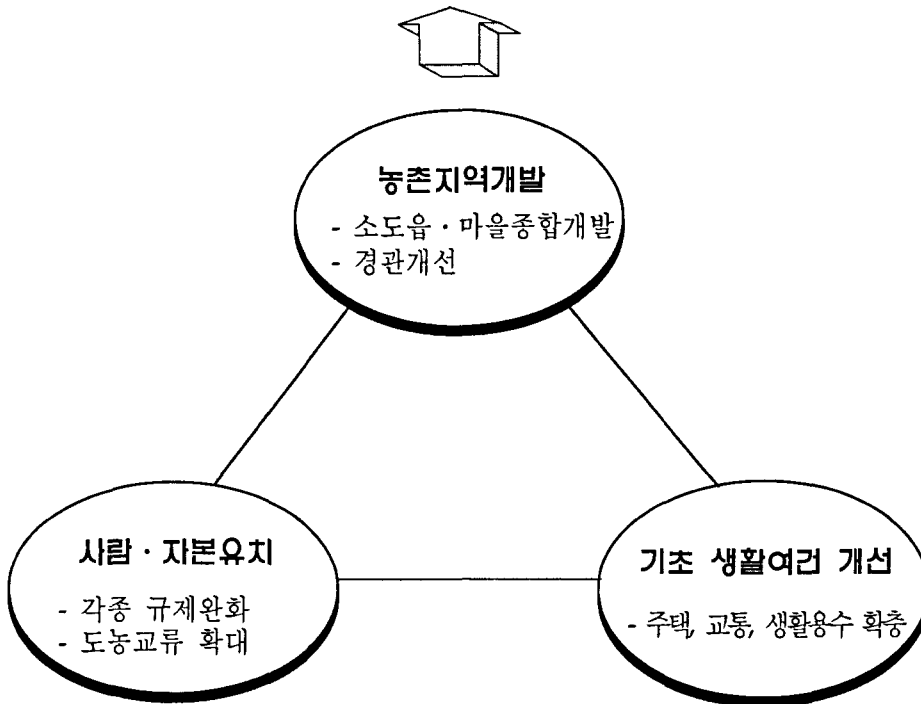
- ◇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 ◇ 고령화 추세에 대응,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
 - * 설치계획 : ('03) 18개소 → ('05) 34 → ('08) 163
 -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
- 산전·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제」 확대
 -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기간 수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 * 이용기간 : ('03) 30일 → ('05) 45일 → ('08) 90일
 - 지원수준을 농촌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
 - * 지원단가 : ('03) 27천원/일 → ('04) 30 → ('05) 35
 - 출산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순회방문진료, 환자수송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체계” 실현
 - 영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노인복지 사업 확대

4.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 삶의 공간, 여가·휴양공간, 친환경·신산업공간으로 자리 매김



- 지역주민·지자체주도의 상향식·종합적 접근방식 채택
- 거점개발 후 인근지역으로 파급효과 확산시키는 전략 추진
-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가.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

- ◇ 소도읍을 거점으로 배후지역과 함께 균형있게 개발
- ◇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

-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집중지원(매년 20개, 총 194개 읍)
 -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 농어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한 권역 단위로 묶어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소도읍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1천개 권역)
 - 주민이 예비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심사하여 우수한 권역 선정 지원
 - 전원생활·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개선
 -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 수변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
 -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등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다양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을 도입

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 농촌에 거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농가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가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주거공간 조성

○ 보다 쉽게 농촌주택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용자조건 개선

- 주택신축 : 20백만원(연리 5.5%, 5년거치/15년상환) → 30백만원(연리 3%, 5/20)

- 리모델링 : 5백만원(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 → 15백만원(연리 3%, 3/10)

*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주택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농촌 빈집을 매입·철거하여 마을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

- 주차장, 마을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또는 캠핑장 등 농촌관광시설로 조성

○ 마을 회관을 개축하여 영유아 보육·건강관리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마을 다기능시설 설치

□ 공공교통체계 구축, 상하수도 확충 등을 통한 농촌생활 편의 증대

○ 오지 공영버스 신규 구입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속 실시

○ 농촌주민 90%(면지역)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8.4%(읍 77.4%, 면 29.0%)

○ 농촌지역에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2013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지원하여 158개 시·군 완료

○ 마을 연결 임도의 公道化, 마을 상류 溪川에 사방댐 시설 확충

다. 투자유치 · 인력 유입 촉진

◇ 도 · 농교류 촉진 및 사람 · 자본 유치프로그램 강화

* 과감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중점 추진
 - 각종 정보제공, 상담·알선,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 추진
 -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증과 배제 등 세제 개선을 계기로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전개
 -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 도농교류센터를 설립·운영
-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의 농촌 유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
 - 민자유치나 제3섹터 방식으로 체육·관광·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군을 발굴하여 홍보 및 기반 시설 지원함으로써 시·군간 경쟁을 촉진
-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전원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농업 테마파크, 수변공간 정비 등을 통한 도시민유입을 촉진
 - 농촌에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정원형 실버타운, 은퇴농장 등을 조성
 - 농업관련 소재를 이용한 농업테마파크,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및 마을 소하천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IV. 지역농업 발전계획

- 시·도, 시·군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지역특수시책(특화작목개발 등)은 지역농업특구,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예시 : 주산지 품목·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발전방안,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유지 방안 등
 -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
 - 교육·훈련,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 특화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협의, 지역특화작목 개발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강화
 - 시·도 농어업특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을 활성화
 -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요구 등의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

여 백

제 3 편

주요 품목별 대책

I. 쌀 대책

II. 원예 대책

III. 축산 대책

IV. 임업 대책

여 백

산업별 대응전략

< 쌀 산업 > :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에 중점

- 2~5ha 규모의 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6ha 수준의 전업농 육성
- 중소농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 RPC 중심으로 품종선택부터 판매까지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

< 원예산업 > :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발전

- 과수·시설채소·화훼 :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노지채소 : 품목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 활성화

< 축산업 > :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품질고급화에 역점

-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브랜드 육성
- 생산, 도축, 가공 공정별 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주력

< 임업 > :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

- 경제림 육성, 「녹색댐」 기능, 「국민의 숲」 조성 등에 역점

I. 쌀 대책

1. DDA영향 및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영세농 중심의 생산구조와 높은 생산비로 경쟁력이 취약

○ 평균 영농규모 1ha 수준 (0.5ha미만이 전체의 44% 차지)

	<u>농가수(2002)</u>	<u>생산비중(2002)</u>
전업농(평균규모)	86천호(4ha)	32%
중소농(평균규모)	471(1.2)	55
자급농(평균규모)	428(0.3)	13

□ 국내외 가격차가 4~5배 수준인 상황에서 DD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에 따라 MMA물량 등 시장개방 폭은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

○ 관세화 유예를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하므로 가격하락과 소득 감소가 예상됨

□ 쌀 값 하락에도 적정 수준의 생산 및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모화를 촉진하고, AMS감축에 대비하여 수매제를 개편

○ 고령농 은퇴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지원수단을 명확화

○ RPC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체제를 구축, 고품질 쌀을 생산

○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안전망 확충방안을 마련

2. 중점 추진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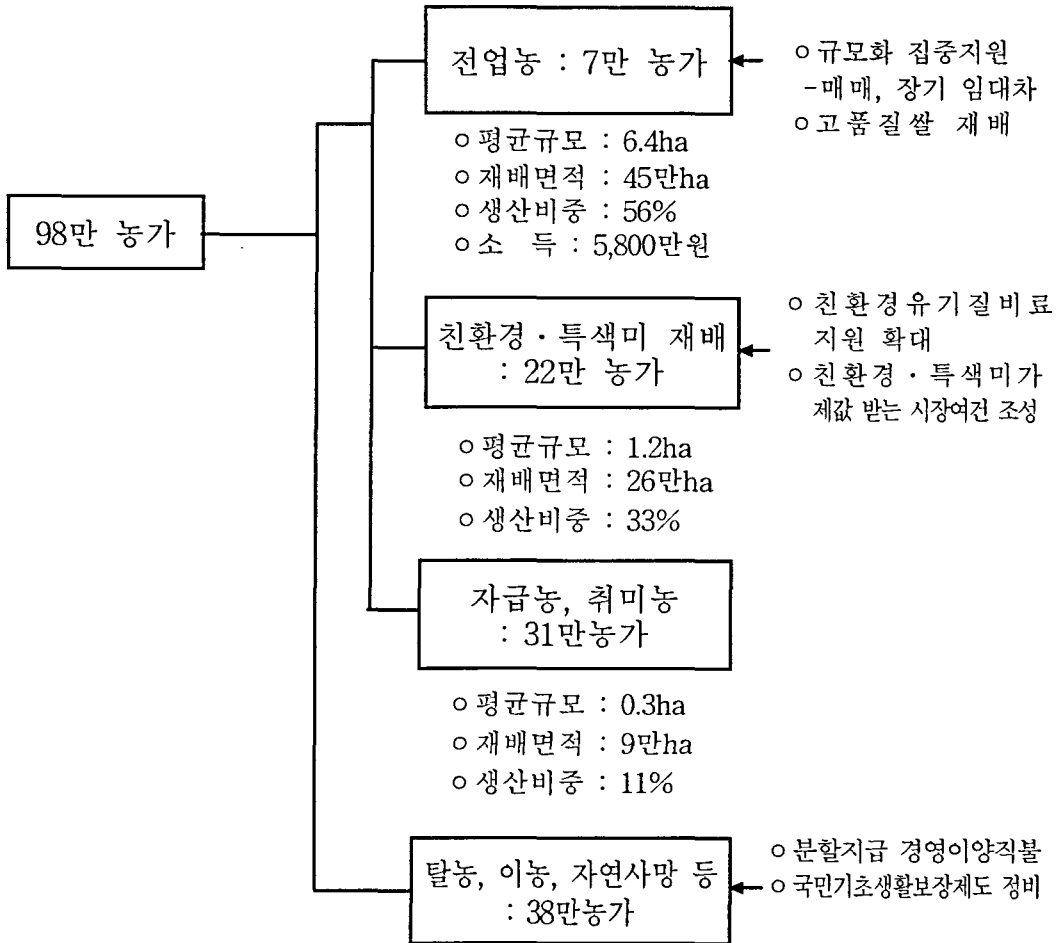
- 개방 확대로 쌀값이 하락하여도 쌀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6ha 수준으로 규모화**를 유도
 - 현재 2~5ha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4천ha**의 농지를 집중 이양
 - * 2~5ha 쌀 농가수 : 74천호(2~3ha 농가 45천호, 3~5ha 29천호)
 -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 매매사업의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조건 개선 등 추진
 -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연간 2천억원 수준)
- 경영이양직불제의 규모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 지급
 - 63~69세 사이의 고령농이 논을 매도하는 경우, '04년에는 진흥지역내 논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장기분할 지급 (2ha까지)
 - (현행) 년 289만원/ha, 1회지원 → (개선) 월 24만원/ha, 최장 8년간
 - '05년 이후는 진흥지역 밖 우량 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
-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되,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민간유통 활성화**, 소득문제를 보완할 **직불제 확충** 등의 안정장치를 갖추면서 수매제도를 개혁

-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방출
 - 공공비축 물량,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관계 전문가·농업인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공공비축제 도입초기의 매입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RPC 등 민간유통기능을 강화
- **RPC**의 수확기 매입을 촉진하여 **원료비 매입량 확대**
 - RPC 매입량을 생산량의 40% 수준까지 확대
 - * RPC 매입량 : ('02) 623만석 → ('08) 885 → ('10) 1,100
 - 규모화, 부실 **RPC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개선 도모
- 미리 소득안정장치를 대폭 보강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
-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여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농법을 실천하는 **중소농가**로 대상을 확대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보조가능총액(AMS)을 활용하여 **전업농가**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보완

쌀산업 구조 전망

〈2002년〉

〈2013년〉



* '03~'13년중 약 385천호(연간 35천호)가 자연사망, 이농, 탈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상당수가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경영이양

II. 원예 대책

1. DDA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 선진국 기준(하빈슨 의장 초안)으로 개방될 경우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차이
 - 고관세 품목이 많은 양념류·특작류는 대폭적인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 감소 등 불가피
 - 과수는 현행 관세가 낮고('04년 45%), 식물검역상 수입 제한으로 영향이 적으나, 검역 해제시 가격 경쟁력이 취약
 - 시설채소·화훼는 관세('04:15%)가 낮고 전문화·규모화가 진전되어 개방 영향이 적고, 수출확대도 가능
- 관세구조,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4대 품목군으로 구분, 정책 차별화
 - 양념채소는 주산지 APC 중심의 고품질 상품화, 브랜드화, 마케팅 기능 강화로 시장 차별화에 중점
 - 노지채소는 출하·판매의 조직화, 물류비 절감 및 안전성 강화
 - 과수는 권역별 APC 중심 회원제 도입,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체제 정착 및 경쟁력 없는 과원의 폐원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
 - 시설채소·화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내수 기반 유지, 전문단지 관리강화, 수출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확대
 - 인삼·특작류는 안전성 확보, 수출확대 및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2. 양념채소

◇ 국내외 가격차가 큰 반면 품질차별성은 미흡하여 DDA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品目群 (유형 1)

- 주산지 APC와 연계한 산지유통의 조직화로 생산-유통을 계열화
 - 주산지 생산자조직에 저장·가공·포장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
 - APC와 규모화된 농가(0.3ha이상)간 계약방식으로 상호 계열화
- 선도농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기계화 등 지원강화
 - 규모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
 - 마늘 주아 재배, 수확회수 절감형 고추품종 등 신품종 보급,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생산기반정비 등을 통해 생산비를 30% 수준 절감
- 전국단위 품목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최저보장가격제도 대신 계약재배 손실보전장치를 도입
 - 우선 지역단위조직에 자조금 지원하고 전국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초기) 의성마늘, 서산마늘, 남도마늘 등 → (확대) 전국마늘연합회
 -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예:평년가격의 80%이하)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주체의 손실 중 일부를 지원 검토
- 점진적 가격하락과 구조조정에 대비, 농가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지원
 -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
 - 주산지 시·군에서 대체작물을 도입, 교육훈련, 부가가치제고 등을 추진코자 할 경우 투자계획을 심사하여 포괄적 보조 지원

3. 무·배추

◇ 국내·외 가격차가 적고 부피가 커 수입이 어렵고 품질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品目群 (유형 2-1)

- 식품가공업체, 민간유통업체, 농협 등 대량 소비처와 농가간 계약 재배 등 계약재배사업을 내실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 김치공장,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를 계약재배 주체에 포함하고,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가공업체와의 공동 유통시설 설립을 지원
 - 절임배추·샐러드·세척채소 등 전처리시설(Fresh-cut) 보완 지원
 - 모든 농가 대상, 소규모 계약방식으로 사업효과에 한계가 있는 계약 재배사업은 규모농(0.3ha), 생산량의 50%이상 계약방식으로 전환
 - 영세 개별농가는 작목반 단위로 일정규모 이상 계약 출하시 사업대상에 포함
 - 안정적인 판로확보, 생산-출하의 조직화 수준 등 마케팅 역량을 평가하여 계약재배 주체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
- 파종에서 수확 단계까지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파레타이징·하역기계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
 - 기계화 보급율(배추)을 '13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
 - 계약재배사업과 연계,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이용 지원 확대
 - GAP 도입을 통해 파종, 시비 및 농약사용 등 재배 표준화
 - ('05) 시금치 → ('06) 당근·양배추 → ('07) 무 → ('08) 배추

4. 시설채소·화훼

◇ 가격차도 크지 않고 품질이 우위에 있는 品目群(유형 2-2)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지원하고, 생산자조직간 사업연합, 농가경영·기술지원을 중점 추진
 - 엄격한 평가를 거쳐 우수농가에 양액시설, 노후화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교체·개보수 중점 지원
 - 유리온실 등 일부 부설시설은 젊고 유능한 농가에 양도되도록 인수자금 지원 검토
 - 생산자조직간 사업연합을 활성화
 - * 광주 동곡농협(11~5월), 강원 흥천농협(6~10월)간 사업연합으로 애호박 연중공급
- 화훼 내수기반확대 및 선진유통을 선도할 권역별 종합유통단지 건설
 - 전국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종합유통단지 건설
 - 종합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포장·품질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습식상자 및 화훼 파렛트 등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
- 수출전문생산단지 내실화 및 수출특화형 마케팅조직 육성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GAP를 우선 도입하고, 안전성모니터링,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확보 등 수출전문생산단지 관리 강화
 - GAP 도입 : (04) 파프리카 → (05) 토마토, 오이 → (08) 딸기, 가지, 매론 등
 - 수출전문조직에 운영·홍보비, 공동선별비 등 중점 지원

5. 과 수

◇ 검역제한이 있으나, 가격경쟁력은 낮은 품목군 (유형 3)

-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피해농가 구제를 위해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공동선별·계산, 공동브랜드 출하** 촉진
 - 매출실적,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APC 회계독립 및 전문 경영체제 도입 등을 평가, 산지유통전문조직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 광역사업기반 구축, 산지유통 개선실적이 높은 조직에 권역별 거점 APC 지원
 - 품목대표조직에 의한 『**과실공동브랜드 회원제**』 유통 촉진
 - 1단계 : 품목별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 품질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 2단계 : 선도농가가 공동브랜드(예: Sunplus)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동브랜드 지정 APC로 출하, APC가 고품질 유통 실현
- 과원 현대화·규모화와 품목별 기술보급 촉진
 - 선도농가에 수형개선, 우량묘목 등 **고품질 생산시설**을 지원, 전체 과수의 70% 이상을 현대화(최상품 출하비율 : 현재 30→13년 60%)
 - 전업·은퇴농가와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장기임차)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 사업**을 과수분야로 확대
 - 주요 품목별 재배·수확후 관리 등 기술 분류·체계화
- 폐업, 경영이양 등을 통해 과잉기초에 있는 **6대과실의 재배 면적을 감축**, 수급안정과 구조조정 도모
- 칠레산 수입증가로 경영불안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6. 인삼 · 특작

◇ 가격경쟁력은 낮으나, 고품질 · 브랜드화 등을 통해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군 (유형 4)

- 인삼은 안전성 확보, 계열화 사업, 기능성 제품개발 등으로 국내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해외홍보강화 등으로 수출 확대
 - 수삼은 '04년산부터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인삼경작방법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GAP 및 생산이력제 실시
 - 인삼제품 확인검사를 강화, 부적격품 수거 · 폐기 · 재검사 등 처분명령
 - 인삼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 수매 · 가공 · 판매계열화사업 추진('04)
 - 장기적으로 수확면적의 60% 수준을 계약재배(농협 25, 민간 35)
 - 성인병예방, 다이어트, 피부미용, 뇌세포성장 등 기능성제품과 인삼캡슐, 인삼초콜릿, 홍삼음료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 활용하고, 해외 홍보비 지원 확대
 - 주요 수출국의 학계와 공동임상실험 확대, 세계인삼엑스포 개최('06)
- 특작류는 품목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실시
 - 녹차는 지역브랜드화,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해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 버섯류는 우량(Virus free) 종균 생산 · 유통을 중점 지원
 - 유전자검정 법제화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종균 유통을 차단('04)
 - 당귀 등 약용작물은 GAP 및 생산이력제를 통한 안전성 강화

Ⅲ. 축산 대책

1. DDA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 그동안의 투융자에 힘입어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

○ '02년말 현재 축산전업농 13천호가 전체 사육의 65%를 담당

* 한우는 2%(4,189호)가 31%, 양돈 18%(2,945호)가 71%, 젖소 38%(4,500호)가 62%
양계 0.7%(1,233호)가 65% 담당

○ 축산전업농 '99~'02 평균 소득은 91백만원 수준

- 축종별 소득 : 한우 117백만원, 돼지 100, 젖소 81, 육계 67, 산란계89

□ 축산물은 UR에서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타 품목에 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분유·꿀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전망

□ 전업화가 진전된 축산업은 고품질·브랜드화·친환경·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에 중점

○ 한우 :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

○ 돼지 : 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형 양돈업을 육성

○ 닭 : 질병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확대

○ 젖소 : 항구적인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우유 고품질화 추진

* 축산업등록제 정착, 친환경·유기 축산직불제 확대 등 선진축산 기반 구축

2. 한 우

- ◇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 종축·사료·사양 관리를 통일하여 품질 개선

-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정물량 [예시 : 최소 4천두 (1일 2두)] 이상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
 - 생산·판매관련 브랜드규약을 제정하고, 참여농가는 이를 준수
 - 일정 조건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참여농가)에 대해 종합자금 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 우선 지원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과 판매망 연결을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 평가체계를 구축
 -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구매자금 우선지원,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등
- ※ 브랜드 한우 비율을 현재 17.4%에서 '13년까지 50%까지 확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개량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24개월령 체중을 610kg까지 확대(현재593)
 - 적기거세,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60% 수준까지 향상(현재35%)
- 국가 가축개량 체계를 효율화하고 축산연구소, 종축개량협회 등에 분산된 종축 등록 및 검정업무를 축종별로 통합·조정

3. 돼 지

- ◇ 우량브랜드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업 육성
- ◇ 자조금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자율적 수급조절

-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의 중점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기존 유망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물량을 70%까지 확대(현52%)
 - 브랜드주체가 농가에 사양관리 전산지도, 사료통일 등 교육 강화
 - 브랜드 참여 농가에 경영종합자금 우선 지원 및 교육시스템 구축
- 적정 분뇨처리,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양돈시스템 구축
 -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한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악취 제거
 - 퇴비·액비 차손보전, 액비화 기술개발 및 사료영양관리 강화
- 돼지고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 가축개량, 후기배합사료 급여 등 사육단계에서 품질을 개선
 - * 육량 생산성 향상(A·B등급출현율 63.5% → 80), 이유자돈수 개선(20두 → 23)
 - 육질중심의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및 예냉·급냉시설 확충
 - 제주도 등 지역청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및 부위별로 균형 소비 유도
 - 의무자조금 정착을 통해 소비홍보 강화 및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관리 도모
 -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선호부위 수요 집중 개발
 - 요리 컨테스트 매년 개최, 다양한 요리개발·홍보

4. 닭

- ◇ 계열화된 닭고기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품질경쟁력 제고
- ◇ 양계장·종계장·부화장 등에 대한 질병 방역체제 확립

-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닭고기 브랜드 고품질화 및 수출 확대**
 - 포장화를 촉진하여 식중독균 오염 방지 등 수입산과 시장 차별화
 - 닭고기 등급관정을 확대하고 등급제에 대한 홍보 강화
 -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출기반 확대
-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조성**
 - 인플루엔자·추백리 등 정기검진 강화로 **종계장·부화장 청정화**
 - 감염닭의 살처분 보상 및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
 - **뉴캐슬병 예방약 무료 공급**, 미접종농가 처분 및 차단방역 강화
 - 닭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 강화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촉진하고, 가축개량·등급제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도모
 - 자조단체 중심의 원종계·종계 도태를 통해 **수급조절 효율화**
 - 종계능력 검정,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병아리 보급 확대**, 사료효율 개선 등 **생산비 절감**
 - 계란 **등급제 확대 실시** 및 **냉장유통 보급 확대** 등 품질 향상

5. 젓 소

- ◇ 생산·유통·소비 구조개편을 통해 우유수급 안정 도모
- ◇ 젓소 사육환경 및 원유의 품질·위생 개선

- 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하여 수급안정 도모
 - 원유 집유 체계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 우유 소비 홍보,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
 - TV매체를 통한 홍보, 우유의 우수성 교과서 반영, 자조금 활성화 등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먹는 습관 형성 및 시유 소비기반 확대
 -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
-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체세포 하위 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유지방 기준 완화를 통해 품질고급화 유도
 -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환경 개선
- 젓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산유능력 검정 등 젓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IV. 임업 대책

1. DDA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 목재는 연간 약 3천만m³이 소요되나 목재자급율은 6%에서 정체
 - 국산재는 대부분 간벌재로 주로 펄프·보드류 원료로 사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1조 5천억원 규모로 재배면적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
 - 밤은 재배면적 79천ha로 연간 9만톤(22백억원) 생산
 - 표고버섯은 재배면적 2,616ha에서 5,247톤(2천억원) 생산
 - 조경수·분재 등 관상자원 재배는 13천ha로 6,300억원 생산
- 선진국 기준으로 개방될 경우 단기소득임산물의 관세감축이 클 전망
 - 밤, 대추 등 고관세 품목 중심으로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 증가 예상
 - 목재류는 현행 관세 수준이 낮아 관세 감축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임산물은 전업 임가 및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 위주로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 임산물** 생산에 중점
 - 목재산업 : 시설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
 - 밤 : 노령목 갱신, 작업로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버섯류 : 톱밥재배 및 시설재배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2. 목재산업

- ◇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재 생산·공급기반 확충
- ◇ 목재제품의 표준화·규격화로 품질향상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 ※ 국내재 공급은 지속 확대 : ('02) 1.6 → ('13) 3.5백만m³

-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쟁력 제고
 -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 및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
 -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낙엽송·잣나무 등을 합판용재 등으로 공급 추진
- 국산재 생산·공급기반 확충 및 장기 안정적인 목재수급 유도
 - 벌채시기에 도달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국산재 활용계획 수립 및 산·학·연이 연계하여 신용도, 신기술 개발 체제 구축
 - 벌채 및 운반 장비의 기계화, 용도별·등급별 생산체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간벌재 수집비 지원 및 임산바이오매스 활용 등 이용 활성화
- 목재 제품의 표준화·규격화 및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보호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촉진
 - 원목, 재제목, 합판 등의 KS규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목조건축 부재 등에 대한 규격 제정
 - 목탄, 목초액 및 방부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04.7월) 및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으로 확대 추진

3. 밤

◇ 경영기반 조성으로 연간 9만톤 생산에 3만톤 수출 유지

* 생산 : ('02) 96 → ('10) 89 → ('13) 90천톤

◇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 고급화

□ 연간 9만톤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생산·경영기반 조성

○ 밤나무 재배면적의 66%를 차지하는 노령목(18년 이상)은 매년 3~4천ha 규모로 갱신하여 2010년까지 완료

○ 저수고 재배 등 집약적 기술재배 및 작업로 시설,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을 확충

- 저수고 재배 : ('03) 1,500→('04) 1,500→('05 이후) 2,000ha/년

- 작업로 시설 : ('03) 1,100→('04) 1,300→('05 이후) 1,500km/년

- 토양 개량 : ('03) 3,312→('04) 6,734→('03 이후) 7,000ha/년

※ 국내 및 중국의 밤재배 실태조사 결과('02~03년)를 토대로 밤산업 종합대책 보완·추진

□ 유통구조 개선, 신제품 개발·보급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촉진

○ 공동선별, 공동브랜드화 출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산림조합,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수출에 유망한 알이 크고 가공이 쉬운 조생종 신제품 개발(3종)

○ 부가가치 증진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생산권역별로 밤박피 가공공장 설치 지원 ('05년까지 5개소)

4. 버섯류 (표고, 송이)

- ◇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 신제품 개발과 재배관리기술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 표고는 연평균 6%이상 증가, 송이는 감소 전망
 - 표 고 : ('02) 5 → ('13) 10천 톤
 - 송 이 : ('02) 373 → ('13) 250 톤

□ 중국의 저가 표고 수입에 대응하여 생산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 경쟁력 확보

○ 현대화된 시설재배 확대

* 시설재배 면적 : ('02까지) 961 → ('05) 1,300 → ('13) 2,000ha

○ 자원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고톱밥재배모델 개발·보급 및 톱밥재배시설비 지원 확대

○ 신제품 개발·보급, 재배관리기술 개발로 고품질 표고생산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

- '10년까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적합한 종균(원목 6, 톱밥 3종) 개발 및 우량품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표고톱밥 연중재배 시스템 개발 및 자연재배법 연구 추진

□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06년까지)으로 생산 증대

* 연간 송이환경개선 : ('02) 1,600 → ('13) 2,000ha

제 4 편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정비

1. 조직 개편 방향
2. 법령 정비

여 백

1. 조직 개편 방향

- ◇ 농림부는 새로운 농정 기조 하에 농업·식품·농촌지역개발 정책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
- 농진청, 유통공사, 기반공사 등도 여건변화에 맞게 기능 개편

가. 농림부 및 소속 기관

- 농림부 조직은 품목 중심에서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처의 업무와 방향을 명확히 하는 명칭변경방안을 검토
 - 농산물생산·유통·농가소득안정·농촌지역개발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
 - 안전성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
 - 농촌 지역의 종합개발, 농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을 대폭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종자관리소 등 소속기관은 검역 등 새로운 업무수요에 맞게 통폐합
 - 국내 검역 및 방역 기능을 대폭 강화

나. 농촌진흥청

- 본 청 및 소속기관을 기능중심으로 개편
 - 품질고급화, 생명공학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에 핵심 역량 집중
 - 수출 및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고부가가치 작목 개발에 사업의 우선 순위 부여
 - 수확 후 품질관리(생산·가공·저장·유통)에 중점
 - 농산물 안전성, 인삼 재배, 농촌 복지 증진, 북방 농업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연구 기능을 강화
- 기술보급체계는 대상과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3개 작물시험장을 통합하여 중복연구 배제

다.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지원 및 농산물소비촉진 기능을 대폭 확충
 - 박람회, 판촉전 등 마케팅 기능은 국가별, 시장별로 통합
 - 수출홍보기능은 수출용 공동브랜드, 전통음식문화 전파 등에 중점
 - 소비 행태, 유통업체 판매정보의 제공 기능 확대
- 구매 및 비축기능은 점차 축소·폐지
 - 국영무역은 일정수준 유지하되, 수입권 공매방식 위주로 전환

라. 농업기반공사

- 생산기반정비 사업위주의 조직을 농어촌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의 명칭도 농어촌공사로 변경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로 전환
 - 안전진단,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난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사조직 강화
-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 수행 기능을 확충
 - 영농규모화 및 쌀 전업농 육성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 농업협동조합 >>

- 일선 조합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육성
 - 경영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도입 등을 확대
 - 부실조합 구조조정 지속 추진,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
 - '06년까지 900개 내외, '13년까지 500개 내외로 통합
- 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의 별도법인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
 - 사업부분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 인사권 등 경영권은 대표이사·전무이사에 위양
 - 중장기적으로 중앙회를 지도사업 전담조직으로 하고, 신용경제사업부분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분리

2. 법령 정비 계획

- '07년 이전까지 「농업·농촌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종합대책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무리
- 경쟁 제한적 규제완화, 도시자본 유치 촉진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로드맵에 따라 완료

< 법령정비 계획 >

추진 년도	법 률	주 요 내 용 안
'04	① FTA특별법 제정 ②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③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④ 농지법 개정 ⑤ 농협법 개정 ⑥ 양곡관리법 개정 ⑦ 품질관리법 개정 ⑧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⑨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⑩ 산림자원관리법 제정	○ FTA특별기금 설치 등 ○ 정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금리인하, 기간연장 등 ○ 범 정부지원시스템 구축, 복지 및 지역개발강화 등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등 ○ 조합장 선거관리 강화, 중앙회 신·경분리 등 ○ 공공비축제 도입 등 ○ GAP 도입기반, 지리적표시제 법적 보호 강화 등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포괄(외식산업, 전처리산업 등 포함 지원) ○ 정부재보험제, 재보험 재원 확보 ○ 투자촉진, 숲가꾸기, 산림사업이력 전산화 등('04)
'05이후	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②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개정 ③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법률 개정 ④ 농촌관광촉진법 제정	○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용 반영('05) ○ 농지은행제 도입 등('05) ○ 도매시장 비상장 및 매취 거래 확대 등('05) ○ 농촌관광 진흥관련 내용 등('06)

제 5 편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농업·농촌의 미래상

I. 중장기 투융자 계획

II.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

여 백

I. 중장기 투융자 계획

1. 투융자 방향

-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
 -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
 -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유발을 최소화
 -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고, 융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농림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융자를 뒷받침
 - 농업예산의 1/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예산 구조를 건실화
 - 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하여 농특회계의 차입규모를 축소
 -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
 -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조정기능을 강화

-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 3년 단위로 평가·조정
 -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융자 효율 저하를 방지

2. 총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전반기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7조원(74%), 융자 14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총 투융자 규모 >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09~'13	
			%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합 계	11,929	5,051	42.3	6,878	57.7
지 방 비	1,663	660		1,003	
자 부 담	621	325		296	

3.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03) 20.7% → ('08) 26.2 → ('13) 30.0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03) 8.6% → ('08) 14.4 → ('13) 17.2
- 생산기반정비 : ('03) 32.6% → ('08) 15.7 → ('13) 8.8

□ 직접지불사업 투융자 비중 대폭 확대

- 직접지불사업 : ('03) 9.4% → ('08) 22.6 → ('13) 22.9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	'08	%	'13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2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

여 백

분야별 중앙정부 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구분	'03	연차별 투융자 규모												
		'04	'05	'06	'07	'08	'04-'08	'09	'10	'11	'12	'13	'09-13	합계
중앙정부투융자 규모	771	882	976	1,033	1,068	1,092	5,051	1,249	1,318	1,369	1,453	1,489	6,878	11,929
1.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191	235	287	283	294	311	1,410	390	435	424	484	479	2,212	3,622
1) 영농규모화 촉진	32	32	45	44	53	59	232	91	109	63	71	53	386	618
2) 친환경농업 지원	9	9	17	19	25	27	97	30	31	35	35	38	168	265
3)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제고	13	11	23	25	29	29	117	32	32	33	36	36	168	285
4) 전문농업인력 육성	13	11	12	13	14	14	65	16	16	16	17	17	82	147
5) 농림업기술 개발·보급	32	34	40	43	47	52	216	57	60	68	73	77	335	550
6)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25	37	47	39	38	36	197	34	27	19	19	19	117	314
7) 농업정책자금 지원확대	64	96	95	80	68	72	411	73	93	120	154	155	595	1,007
8) 지역농업 육성 지원	4	4	9	20	20	23	76	57	68	70	80	85	360	436
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59	229	227	257	277	285	1,274	338	366	405	413	447	1,968	3,242
1)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157	225	221	252	271	280	1,250	331	360	398	407	440	1,936	3,186
2) 농외소득 증대	2	4	5	5	5	5	25	6	6	6	6	7	32	57
3.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66	82	102	152	155	157	649	181	201	231	244	256	1,113	1,761
1)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	8	14	23	33	33	35	139	39	39	40	41	41	200	339
2)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6	10	26	28	28	29	120	44	54	61	62	62	284	404
3) 농촌지역 개발	52	58	53	91	93	93	389	98	108	130	141	153	630	1,019
4. 농산물유통혁신	52	66	108	99	107	102	481	101	83	75	98	95	452	933
5. 산림자원 육성	50	58	60	62	64	66	309	75	75	77	79	81	387	696
6.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212	193	180	172	171	928	164	158	157	136	132	747	1,675
1) 농업생산기반 정비	212	183	166	153	147	145	794	142	135	134	112	108	632	1,426
2) 농업기계화 지원	39	29	27	27	26	26	134	23	23	23	23	23	115	249

여 백

II.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

농업 :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농가호수는 '02년 128만호에서 '08년 99만호, '13년 80만호로 감소
 - 농가인구 비중 : ('02) 7.5% → ('08) 4.8% → ('13) 3.4%
- 쌀 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50
 - 축산전업농/사육비중 : ('02) 13천호/65% → ('13) 20/85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축산·원예 등으로 다양화
 - 농업 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8) 30 → ('13) 25

농업인 :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농가소득 전망 ('02) 2,447만원 → ('08) 3,598 → ('13) 4,268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8) 104 → ('13) 105
- 농가소득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
 - ('02→'13) : 농업소득 46% → 33, 농외소득 54 → 67

농촌 :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참고 1>

농업 · 농촌종합대책 로드맵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① 산업정책			
농업체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제도 개편 ○ 경영이양 직불제 : 연금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05) ○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 ○ 농지은행제도 도입('05) ○ 진흥지역 밖 우량논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05) 	
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비료 공급 : 60만톤 ○ GAP 도입근거 마련 ○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 ○ 산지공동마케팅 조직 :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5%('05) ○ 70만톤('05)으로 확대 ○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 ○ 96개 품목 실시('06) ○ 100개소('08)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로 확대('10) ○ 150만톤으로 확대('13) ○ 200개소('13)로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 ○ 농산물 영양성 표시제 도입('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 50억불('13)
② 소득정책			
직불제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투융자 비중: 10.2% ○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 실시(25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7%로 확대('08) ○ 경관보전직불제('05) ○ 생산중립직불제('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로 확대('13)
경영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전국 실시 ○ 국가재보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 소득안정계정 도입('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
농외소득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관광마을 : 32개 ○ 농공단지 : 30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개소('05) ○ 농촌관광축진법 제정('06) ○ 314개소로 확대('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개소로 확대('13) ○ 394개소로 확대('13)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③ 농촌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경감율: 30% ○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로 확대('06) ○ 중위수 소득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로 확대
교육·의료·복지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생 교육비 지원: 1.5ha미만 농가('03.1ha) ○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ha미만 농가 ○ 여성농업인센터: 2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농가로 확대('05) ○ 2ha미만 농가로 확대('05) ○ 34개소('05), 163개소('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농가로 확대('10)
농촌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육성: 매년 20개소 ○ 농촌마을종합개발: 16개 권역 ○ 주택임자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개('05) ○ 경관협약 시행('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개소로 확대('13) ○ 1,000개권역으로 확대('13)
④ 법령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 ○ FTA특별법 제정 ○ 품질관리법 개정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농협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05)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05)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 	
농가소득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을 개정('05) ○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 산림자원관리법 제정('04) 		